

2018

#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통일부



## MESSAGE



통일부장관 조 명 균

2017년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첫 걸음에 나선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네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에는 전례 없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관계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완전히 단절되었고, 최소한의 연락채널마저 끊긴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종합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정책 비전으로 천명하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3대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우리가 주도하고,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키며, 상호 존중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국민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며, 국제사회와 열린 자세로 협력한다는 원칙을 표방했습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정부는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주요 계기마다 북한에게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여 민간 차원의 대북접촉을 허용했고, 산림·환경 전문가 교류와 국제체육행사 계기 남북 체육교류를 지원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북한에 올림픽 참가를 제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한편,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기업 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금강산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등을 북한에 거듭 제의했고, 이산가족 기록 수집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개관 등 국가 차원에서 분단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향 아래 2015년 이후 2년 만에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공여를 결정했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면서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또한, 3만 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국회, 전문가 등과 함께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방식과 의제 등을 논의하고 관련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부터는 가칭 '통일을 위한 약속'을 본격 준비하려 합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고, 국민들 속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들도 추진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국가들과 국제사회, 재외동포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연락채널이 복원되었습니다. 북한 인원 500명이 올림픽에 참가한 가운데,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통해 '평화올림픽'이 성사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특사를 교환하고, 정상회담에 합의했습니다. 2017년 한반도의 엄중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직은 여리고 작은, 평화의 소중한 불씨를 지키고 키워서 한반도에 구조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열망 속에 출범한 정부답게,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8 통일백서』의 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8년 4월

통일부장관 조 명 균

발간사

**1장 대북정책**

제1절 _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14
제2절 _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	19
① 정책배경 및 비전 .....	19
② 3대 목표 · 4대 전략 · 5대 원칙 .....	23
③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29
제3절 _ 통일공감대 확산 .....	34
① 통일을 위한 약속(통일국민협약) .....	34
②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 지원 .....	35
③ 민간 협력을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	36
제4절 _ 국제사회와의 협력 .....	44
① 정부 간 대화 활성화 .....	44
②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	47
③ 재외동포 협력 강화 .....	49
④ 독일 통일 · 통합 경험의 공유 .....	50

**2장 남북 교류협력**

제1절 _ 남북 교류협력 환경변화 .....	56
① 교류협력 환경변화 .....	56
②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	60
③ 남북출입시설물 관리 .....	64
제2절 _ 남북 경제교류 .....	66
① 남북경협기업 지원 .....	66
②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추진 .....	68
제3절 _ 남북 사회문화교류 .....	70
① 문화유산 교류 .....	70
② 종교 및 문화 · 예술 · 학술 교류 .....	72
③ 체육 교류 .....	74
④ 지방자치단체 교류 .....	75

<b>제4절</b> _ 남북 개발지원협력 .....	77
① 민간교류 재개 .....	77
② 국제협력체계 구축 .....	78
③ 개발협력 역량강화 .....	79
④ 중장기 계획 수립 기반 마련 .....	81
<b>제5절</b> _ 개성공단 피해지원 .....	82
① 지원 대책 지속 추진 .....	82
② 추가 피해지원 결정 .....	84
③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 .....	85

### 3장 인도적 문제 해결

<b>제1절</b> _ 이산가족 .....	96
① 이산가족 현황 .....	96
②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 구축 및 공감대 확산 .....	97
③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	100
<b>제2절</b> _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	102
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 .....	102
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	103
<b>제3절</b> _ 인도적 지원 .....	107
①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 지속 .....	107
② 인도적 지원 추진 역량 강화 .....	109
<b>제4절</b> _ 북한인권 .....	111
①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	111
② 국제사회와의 협력 .....	115
③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	116

### 4장 남북대화

<b>제1절</b> _ 남북대화 추진 .....	124
<b>제2절</b> _ 남북회담 역량 강화 .....	129
① 남북회담 상시 대비태세 확립 .....	129

② 회담 전문성 강화..... 131

## 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_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137

**제2절** \_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 140

① 사회적응 기본 프로그램..... 140

② 진로·우리사회 이해 교육..... 142

③ 아동·청소년 교육 ..... 144

④ 초기 건강관리 교육..... 145

⑤ 심화·직무교육 ..... 147

**제3절** \_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 150

① 가족관계등록 및 주택 지원 ..... 150

② 주요 정착금 지원..... 151

**제4절** \_ 북한이탈주민 자립 기반 마련 ..... 157

① 취업 지원 ..... 157

②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사업..... 162

③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 164

④ 생활안정 지원 ..... 167

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169

**제5절** \_ 북한이탈주민 협력체계 구축 ..... 173

## 6장 통일교육

**제1절** \_ 통일교육 운영 및 기반 확충 ..... 184

① 통일교육과정 운영 ..... 184

②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189

③ 제5회 통일교육주간 운영 ..... 193

④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 196

**제2절** \_ 학교통일교육 지원 ..... 197

①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 197

②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 199

③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 200



④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201
<b>제3절 _ 사회통일교육 지원 .....</b>	<b>203</b>
①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회통일교육 실시 .....	203
② 통일교육위원 교육활동 지원 .....	205
③ 통일관 운영 및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	206
<b>제4절 _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b>	<b>209</b>
① 현황 .....	209
②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	210

## 7장 정책추진 기반 재정비

<b>제1절 _ 정책혁신위원회 활동 .....</b>	<b>222</b>
<b>제2절 _ 북한정보 서비스 제공 및 연구저변 확대 .....</b>	<b>224</b>
① 북한정보포털 서비스 운영 .....	224
② 북한자료센터 운영 .....	225
③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	227
<b>제3절 _ 법·제도적 기반 구축 .....</b>	<b>229</b>
①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229
② 통일법제 구축 .....	231
<b>제4절 _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b>	<b>233</b>
① 남북협력기금 수입 .....	233
② 남북협력기금 지출 .....	234

## 부록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	240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	260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	273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	276

찾아보기(INDEX) .....	278
-------------------	-----

# UNIFICATION WHITE PAPER



# 01 대북정책

# 01

제1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제2절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제3절 통일공감대 확산

제4절 국제사회와의 협력



남북이사가 첫 회차에 있다. 매우 중요하다. 그화 비운

## 1장 대북정책

2017년은 핵능력 완성을 목표로 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반복·강화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 해였다. 남북관계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완전히 단절됨으로써,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락채널조차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 2월 12일 이후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이후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가속화하여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제재·압박 일변도의 정책이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대북정책에 있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7월 6일에는 대통령이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5대 원칙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 방문 등을 북한에 제안하였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해결이 함께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11월 1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5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11월 21일 정부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정리하여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발표하였다. 역대 정부들처럼 차별화된 명칭을 붙이지 않은 것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채워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남북한 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한반도정책’이라고 표현하였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남북간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또한, 이를 제도화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 견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을 위해 7월 24일 통일부에 신경제지도TF(테스크포스)단을 설치하였다. TF단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기본계획(안)을 준비하면서 국책연구기관 및 유관부처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유관국의 민간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통일 관련 민간단체, 학계 등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지역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통일준비 역량 강화사업을 개최하고, 공모방식으로 학술회의를 지원하여 소통과 논의의 장을 확대하였다. 또한 「평화로 2017」과 「통일문화 기획행사」, 대중음악·영화·미술 공모전 등 국민들이 축제·문화 행사를 통해 통일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 제1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북핵문제는 2017년에 접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2016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2017년 들어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핵문제의 악화와 국제정세 변화의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선행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제재·압박과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진전에 기여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여건 조성을 모색해 나갔다.

6월 30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제재는 외교의 수단이며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미가 대북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쾰른 재단 연설(베를린

구상)을 통해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독일 코르버재단 초청 연설(7.6.)

대통령 독일 코르버 재단 초청 연설(베를린 구상 발표, 7.6.)

-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중략)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화성-12형’,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은 7월 4일과 7월 28일에도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였다.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부 성명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대북제재 결의를 4차례나 채택(6월 2일 2356호, 8월 5일 2371호, 9월 11일 2375호, 12월 22일 2397호, UN 안보리 결의 현지일자 기준)하였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과 섬유의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 발급 금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 수입 경로를 차단했다. 더불어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여 나갔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11월 6일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관계자 18명을, 12월 11일에는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였다.



2017년 북한의 주요 도발 및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

날 짜	주요 내용
2.12.	• 북한, '북극성-2형'탄도미사일 발사
5.14.	• 북한, '화성-12형'탄도미사일 발사
5.21.	• 북한, '북극성-2형'탄도미사일 발사
6.2.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채택
7.4.	• 북한, '화성-14형'탄도미사일 발사
7.28.	• 북한, '화성-14형'탄도미사일 발사
8.5.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8.29.	• 북한, '화성-12형'탄도미사일 발사
9.3.	• 북한, 6차 핵실험 실시
9.11.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9.15.	• 북한, '화성-12형'탄도미사일 발사
11.6.	•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11.29.	• 북한, '화성-15형'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무력 완성 선언
12.11.	•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
12.22.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정부는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하며,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9.22.)

-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前 미국 대통령의 말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7월 1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 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하고, 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더불어, 민간 교류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정부의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는 11월 7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12월 14일에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특히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견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간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4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 제2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 1 정책배경 및 비전

#### (1) 정책배경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갈등 속에서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전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불과한 정전체제의 장기화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까지 중첩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심화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였다. 특히,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핵무력 완성 선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긴장이 격화되어,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때로는 제재와 압박으로 때로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면 국제사회는 제재를 가하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다시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고 남북 간에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또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의 '남남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북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남북간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도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입장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북정책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의 해결을 요구한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 남북간 신뢰 형성, 국제사회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분단으로 단절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가 처해 있는 이 같은 엄중한 현실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베를린 구상 등 여러 계기에 발표했던 정책들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으로 종합 정리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단순한 대북정책의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완성해 나가는 '열린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나갈 예정이다.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추진 체계도



## (2) 정책비전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운데,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 1) 평화 공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평화 공존’을 최우선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이자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화 공존’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견고한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 공존’을 실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화와 통일의 과정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남북이 함께 협력하여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다.

### 2) 공동 번영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남과 북이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공동 번영’을 또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기회를 주고, 북한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북간 경제 격차를 줄여 나가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한반도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적 범위를 넓혀, 동북

아시아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환경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한과 동북아 이웃국가들이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성을 높여 나간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동 번영’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러한 평화가 다시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도를 지향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 2 3대 목표·4대 전략·5대 원칙

### (1) 3대 목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3대 목표는 ①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이 세 개의 목표는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면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은 당면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나아가 60년 넘게 지속된 불안정한 정 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고 항구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2)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고 부침을 거듭해 왔다는 문제인식 하에,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남북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자 한다.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협정’ 및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체결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하고자 한다.

## 3)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은 남북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을 실행하여 남북한을 넘어 미·중·일·러 등과도 유대를 강화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 한다. 이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



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한 협력 사업에 당장 참여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은 관련 국가들과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관련 국가들간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력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2) 4대 전략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1) 단계적·포괄적 접근

북핵문제는 제재·압박과 대화·협상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한다. 우선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동참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핵 동결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이 체제 생존에 대한 우려의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병행하고자 한다. 즉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여 타개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 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선후 또는 양자 택일이 아닌 상호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진전이 가능하다. 북핵문제의 해법을 두고 관련 국가 간 이견이 있고, 특히 미국과 북한과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다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남북관계는 비핵화 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남북간 활발한 대화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여 절충점을 찾아나감으로써, 협상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핵화 대화가 개시되면,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유기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다.

## 3)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요인들을 가능한 한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내적으로는 국회·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인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다질 것이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남북간 중요한 합의를 법제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는 직접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은 남북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남북 주민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통일' 추구를 말한다. 남북간에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 북한주민 인권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임산부·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포용하면서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남북간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3) 5대 원칙

정부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5대 기본원칙을 견지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이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북정책을 독

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자체 방위역량을 강화하여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셋째,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이다. 이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존중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3-No」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적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이다. 대북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지자체·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열린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1) 개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핵심으로,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표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 등 여건 조성시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차원의 상호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역내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남북경협 과정에서 포괄적 호혜주의를 견지하고 그간 체결한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능동적으로 동 구상의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반도의 정세 변화로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부는 사업들 간의 상호 융복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주변 국가의 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해 나갈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망과 해운망을 연계하여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연해주 지역의 다자간 개발협력을 추진 중인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은 우리 정부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경제 변화를 남북경협 과정에 접목한다면 기존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자원·물류·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주요 추진 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접경지역의 3대 권역별 계획과 남북 '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의 환동해권에서는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몽골과 러시아 등의 북방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화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 여유분을 한반도와 일본까지 연계하고자 하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논의를 비롯하여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한반도 가스관 연결사업과 남북간 자원 공동개발 선례가 있었던 북한 광산 활용 사업 등은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환서해권에서는 풍부한 인구나 산업 인프라, 활발한 교역 등을 토대로 물류와 산업으로 특화된 경제벨트를 구축할 것이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와 중국의 경제협력에 북한이 동참할 경우 다양한 다자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의 수도권과 인접한 북한

의 개성-해주, 평양-남포에서 협력을 이루어낸다면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경의선을 축으로 국제적 산업협력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에서는 수자원과 산림자원의 공동 관리를 비롯하여 감염병과 병충해 공동 방제·방역과 같은 남북협력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비무장지대(DMZ) 활용방안 연구도 참고하여 DMZ를 친환경적 생태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제도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의, 산업표준 단일화를 위한 교류와 용어 정립, 남북간 경제공동체 진입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위한 합의 체결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이루어 나가하고자 한다.

### (3) 추진 성과

정부는 7월 24일 통일부에 신경제지도TF단을 설치하였고, 11월 3일 「신경제지도 TF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하였다. TF단은 구상의 기본계획(안)을 준비하면서 역대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남북간 기존 합의 및 사업 추진 경험을 검토하는 한편, 변화된 상황에 맞춘 새로운 과제와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기관간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11월 3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와 2018년도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고 12월 19일에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11월에는 전문가



들의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로드맵 구축 정책연구용역도 발주하였다.

한편 9월에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정상은 ‘9개의 다리’<sup>1)</sup> 등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 경제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1월에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전문가들로부터 남북중 다자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12월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기관과 양국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12월 7일에는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정부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함께 동북아시아 유관국을 대상으로 12월 8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에서는 중국, 몽골, 러시아 및 EU의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물류·투자·교역 등 다자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1)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분야

## 제3절 통일공감대 확산

### 1 통일을 위한 약속(통일국민협약)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이다.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통일 및 대북정책은 진보와 보수로 대별되는 정치 세력간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정부가 바뀌면 이전에 추진되었던 정책이 단절되고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그 동안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대북정책 단절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 국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사회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 하에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들과 협업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약속을 만들어 내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2017년에는 주요한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시민사회 관계자 및 전

문가 등으로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협약 추진 방식·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연구용역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9월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통일을 위한 약속(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위한 ‘준비모임’을 구성하여, 추진 방식과 의제 등을 논의하였다.

## 2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 지원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대국민 소통 활성화, 민간 통일의지 결집, 지역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017 민간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기반 통일사업」 및 통일문화주간(10.13~19)과 연계한 「국민참여 통일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기반 통일사업」은 통일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방방곡곡 평화로, 구석구석 통일로’를 주제로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되었다. 「국민참여 통일사업」은 평화열차 테마 전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지역기반 통일사업

행사명	일자	개최지역
2017 부산통일포럼	7.19.	부산
대학생 통일솔루션	8.23.~25.	대구와 광주 일대
한라-백두 프레젠테이션 대회	9.16.	제주
2017 충남 통일역사문화포럼	9.22.	공주
2017 강원통일포럼	10.20.	춘천

또한, 정부는 학계의 통일논의 확산을 위해 학술행사 지원사업인 「통일기획패널」을 추진하였다. 공모방식으로 북한·남북관계·통일 분야의 학회와 대학 연구단체 16곳을 선정하여 학술회의 개최 비용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였다.



한라-백두 프레젠테이션 대회(9.16. 제주)



국민참여 통일사업(10.13.~15. 서울)

### 3 민관 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

#### (1) 「평화로 2017」

정부는 2015년부터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통일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평화로 2017」를 행사명으로 하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역광장 일원에서 61개 단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주제별 부스를 운영하였다. 또한 사전 신청을 통해 국민참여 부스를 모집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체험관도 설치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화로 2017」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통일로 (서울역 광장)	주제별 부스	통일관련 기관·단체 참여하에 주제별 부스 전시 (이산가족, 사회문화, 대북지원 등 8개 주제)
	국민참여 부스	학교·동아리·학생 소모임 등 그룹별 공모, 자율적 부스 구성 방식으로 미술, 통일 팔찌 만들기 체험 등 진행
	평양올림픽 체험관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메시지 전달
	평화열차 테마 전시관	쌍방향 소통(인터랙티브) 방식 가상 평화열차 체험, 평양역 티켓 매표 등
평화로 (서울로 7017)	한반도 평화 트레킹	제주~나진~선봉 한반도 주요 도시 상징물 설치·체험
	한반도 신경제지도 영상체험	'한반도 신경제지도' 설명 및 체험 프로그램
	주제별 평화토크	취·창업(적성·흥미검사), 보건의료(남북 민간의학 소개, 한의학 용어 맞추기 등)
	한반도 전통놀이터	투호, 딱지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미래로 (만리동 광장)	한반도 평화·통일놀이터	통일 비추미 한지 동산, 한반도 자전거투어(VR), 평화·통일 레고, 파우치 만들기 등
	평화와 통일 뉴스	청소년·학생 대상 평화와 통일 뉴스 제작 (통일부 출입기자단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진행)
	통일 요리교실	개성 손만두, 북한 전통전, 평양 주전부리 등 북한 전통요리 실습
	평화·통일 사진전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 전시(임종진 사진작가)
부대행사	상설무대 공연	폴포츠(Paul Potts) 공연, 북한이탈주민 공연, 시낭송, 합창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명사 강연	한반도 평화 주제 미니 특강(평화·통일 관련 인문학, 미래 변화, 스포츠 등) * 강사: 정혜신, 송길영, 현정화

## (2) 통일문화 기획행사

국민들에게 익숙한 문화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한 통일문화행사는 그간 수도권에 집중되었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통일문화행사 개최지역을 DMZ 인근지역과 국외로 다양화하였다. 개최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국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통일문화행사를 기획하였다. '통일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17 통일문화기획행사」는 통일음악회와 통일염원 한마음 걷기대회, 그리고 베를린 통일문화행사로 각각 개최하였다.

8월 4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오페라 갈라 콘서트」와 「통일통기타 페스티벌」은 휴가철 피서지를 찾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통일음악회로 기획하였다. 9월 2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열린 「통일염원 한마음 걷기대회」는 일반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전래놀이 등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베를린 통일문화행사」는 매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빛 축제(10.6~15.)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이산가족을 주제로 이은숙 작가의 설치미술 '기억'이 전시되었고, 한반도 생태계 보고인 DMZ 영상 상영과 함께 DMZ 사진첩 5천부도 배포하였다.



오페라 갈라 콘서트  
(8.4. 강원 고성)



통일염원 한마음 걷기대회  
(9.2. 한강시민공원)

### (3)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정부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대중음악, 영화, 동요 외에 미술까지 분야를 확대하였다.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유니뮤직레이스 2017)」에는 록,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255개 팀이 응모하였다. 이 가운데 최종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10월 14일 서울 백암아트홀에서 관객 5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선 공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상 ‘전범선과 양반들’의 〈전선을 가다〉 등 4곡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공연은 음악방송 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2017 통일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에서는 출품된 108편의 시나리오 가운데 「실향-그리움으로 돌아가자」 등 중·단편 5편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11월 23일 서울 용산CGV에서 상영되었다. 한편, 2015년과 2016년에 제작비를 지원했던 중·단편 영화 3편을 「그리다」라는 옴니버스 영화로 만들어 전국 30개 스크린에서 개봉하였다.

「2017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에는 총 109곡이 접수되었고, 이 중 선발된 9개 팀이 참가하여 11월 18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본선 대회를 열었다. ‘평화 통일상’을 수상한 〈통일 등불〉 등 9곡은 실황 음반으로 제작하여 배포되었다.

통일미술 공모전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 공모와 기성 작가 지정공모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일반 공모 출품작 116점 가운데 선정된 15점과 지정공모 작품 64점 등 총 79점의 작품은 「2017 통일테마전」이라는 이름으로 12월 5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전시회는 〈경계 155〉, 〈더불어 평화〉의 2개 전시로 구성되었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유니뮤직레이스 2017」



영화 <그리다> 중 한 장면



「2017 창작통일동요 공모전」

#### (4)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사업

정부는 분단 70여 년간의 통일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5년부터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집대상 기록물은 통일과 분단을 기록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민간이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문서, 사진, 영상, 박물관 자료 등이 해당된다. 2017년에는 남북간 종교 교류와 문화재 발굴 등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6,224건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아울러 사료 수집을 보완하고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종교 및 문화재 교류 등에 기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구술채록도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그 동안 수집된 사료를 활용한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평화로 2017」 행사에 통일사료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여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원 공사 등 과거 남북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였다.





2017 통일사로 홍보 리플릿

### (5) 인터넷 통일방송 「Uni TV」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인터넷 통일방송 「Uni TV」를 운영하고 있다. Uni TV는 통일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TV 등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Uni TV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남북관계 소식과 정부·민간의 통일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통일 NOW」가 있다. 2017년에는 「통일 NOW」 중 <통일의 뿌리>를 남북 교류·협력 성과와 주요 사건을 다룬 다큐 <통일발자국>으로 개편하였다. 「통일 NOW」는 KTV국민방송, 아리랑국제방송TV, 국방TV를 통해서도 매주 송출되고 있다.

2017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 가지 기획 콘텐츠를 제작했다. <동갑내기 북남불남>은 북한이탈주민 청년과 프랑스인 유학생의 문화체험기이며, <통일 법보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법>은 북한이탈주민이 겪은 법률문제 사례를 다루었다. <청둥아 진정해>는 통일된 미래에 남북 주민이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린 웹 드라마이다.

2017년에는 다른 방송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국방TV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실향민의 아픔을 그린 <마지막 DMZ>(2편)를 제작하였으며, 브릿지TV와 공동으로 <청년, 통일을 그리다>(20편)를 제작하였다.

Uni TV는 다른 공공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송, 산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법률방송, 복지TV, 소비자TV 등으로까지 송출을 확대하였다.



통일 NOW <통일발자국>



리얼 버라이어티 <동갑내기 북남불남>

## (6) 통일준비위원회 지원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2014년 출범하였다. 이에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와 국민적인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해 통준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통일 비전과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부는 2017년에도 매월 개최되는 통준위 기획운영단 회의에 참석하여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의 정책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통준위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통준위가 2014년 출범 이후부터 활동했던 기록들을 정리한 「통일 준비백서」를 2017년 5월 1일 발간하였다. 통준위는 「통일준비백서」의 발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감하고, 7월 11일 행정자치부 폐지령에 따라 폐지되었다.

## 제4절 국제사회와의 협력

### 1 정부 간 대화 활성화

정부는 미·중·일 등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평화통일전략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문 지역을 유럽 및 아세안까지 다변화하고 총 7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발표 직후, 통일부 차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미국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었다. 4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상반기 미국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 트럼프 행정부 및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전략 및 대북 대화에 대한 전망, 북한에 대한 선제적 옵션 등을 주제로 토론하여 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미국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에서는 통일부 차관이 국무부 토마스 새넌(Thomas Shannon) 정무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였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에 관한 상호 의견을 심도있게 교환하였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비전 및 정책 기초를 설명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상원의원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필요한 미 의회의 협조도 요청하였다. 아울러 유니세프(UNICEF)와 유엔인구기금(UNFPA) 고위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UN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양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한반도 문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각각 개최하고, 애틀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의 초청으로 동 기관을 방문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여러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에게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

유럽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는 독일 통일 27주년을 계기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독일에서 진행되었다. 말루 드라이어(Malu Dreyer) 독일 연방상원의회의장 겸 라인란트-팔츠주 주지사는 10월 3일 마인츠에서 개최된 독일 통일 27주년 기념식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를 공식 초청하였으며, 이에 통일부 차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리스 글라이케(Iris Gleicke)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겸 신연방주특임관 등 독일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독일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를 진행하였다. 외교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등 중국의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납치자 대책본부 등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대북 정책 방향과 추진 성과를 설명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대양주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를 진행하였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외교부 관계자와 의회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세안지역 평화통일전략대화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 사무국과의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내 외교 사절(주한 공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와 현장 견학 프로그램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발표 이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와 주한 주요국 대사 등 52개국 주한공관 대사들을 대상으로 11월 15일과 12월 13일에 정책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통일부 장관이 직접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구상이 담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주한 공관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부와의 우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3월 9일과 10일에 하나원, 한반도미래센터, 오두산전망대, 판문점 등을 방문하고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2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정부는 국제사회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을 국내외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미·중·일·러·유럽·아세안 등 주요국의 전·현직 관료들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내 행사에는 주 평 (Zhu Feng) 난징대학교 교수, 존 에버라드(John Everard) 전(前) 북한 주재 영국대사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참석하여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전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비공개 포럼에서는 북한 및 동북아의 정세 변화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10여개 국가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반도국제포럼(KGF) 국내세미나(10.17. 서울)

한편, 한반도국제포럼 국외세미나는 미국, 일본, 유럽, 아세안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미국 세미나는 11월 2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근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일본 세미나는 8월 29일 도쿄에서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 연구기관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을 주제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럽 세미나는 벨기에와 독일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벨기에 세미나는 9월 27일 프랑스국제문제연구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한국 및 유럽의 이해와 인식,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럽의 역할을 다루었다. 독일 세미나는 9월 29일 베를린에서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아세안 세미나는 7월 2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동남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는 주변국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한중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중 협력관계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해외의 전문가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방한 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는데, 2017년에는 98회 진행하였다.



### 3 재외동포 협력 강화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월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통일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생통일퀴즈대회와 한민족포럼을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동포사회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고려일보, 한인일보 등 현지 동포신문에 국문과 러시아어로 통일문제 관련 현지 및 국내 전문가 기고문 게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전략대화 시 각국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이외에도 현지 여론주도층과 교민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부 차관은 9월 30일 독일 베를린, 11월 30일 미국 뉴욕 지역 교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9월 벨기에, 11월 중국과 호주·뉴질랜드에서 현지 동포들을 대상으로 대북·통일 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동안 미·중·일 등 주변국 위주로 진행한 대북·통일정책 설명 대상 지역을 2017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벨기에, 독일,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해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변화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부 장관은 10월 17일 세계 한인언론인협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설명하였다.

#### 4 독일 통일·통합 경험의 공유

정부는 독일 통일 사례로부터 한반도 통일·통합에 대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의 통일·통합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독일연방내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1년부터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제7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정당체제 통합과 환경문제 대응에 관한 독일의 사례를 평가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시사점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 등 여러 분야에서의 독일 통일·통합 관련 주요 정책문서 사본을 한국으로 이관하였다. 이관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독일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문서에 대한 평가와 해제를 담아 『독일통일 총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교통·통신, 문화, 언론, 환경, 농업 분야에서 『독일통일 총서』를 발간하였다.

## 독일통일 총서

연도	발간 분야	비고
2013	군사, 행정, 구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구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4권
2014	경찰, 정당, 과거청산, 여성, 가족	5권
2015	통일비용, 신탁청, 보건·의료, 연금·사회복지, 노동·실업	5권
2016	화폐통합, 통일교육, 교육 통합, 외교 1, 외교 2	5권
2017	교통·통신, 문화, 언론, 환경, 농업	5권

정부는 2015년 「독일통일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독일 통일·통합과 관련하여 그간 작성한 정책보고서와 수집해온 자료, 국내 전문가들의 주요 연구 자료, 독일 정부로부터 이관받은 정책문서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17년에는 그간 축적된 독일 통일 관련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통일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통일 아카이브」를 「통일준비연구 종합 DB」(<http://udbs.unikorea.go.kr>)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운영 중인 통일 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자료관리의 효율성도 개선되었다.

# UNIFICATION WHITE PAPER



02

## 남북 교류협력

02

제1절 남북 교류협력 환경변화

제2절 남북 경제교류

제3절 남북 사회문화교류

제4절 남북 개발지원협력

제5절 개성공단 피해지원

2017 북한개발협력 민관 정책포럼



## 2장 남북 교류협력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책 방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정부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다각적인 남북교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 등을 감안하여 방북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북한의 태도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

한편,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6.2.), 2371호(8.5.), 2375호(9.11.), 2397호(12.22.)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 또한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로 두 차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11.6. / 12.11.)를 취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대내외 환경 가운데서도 민간 부문의 대북 교류 수요는 꾸준히 이어졌다. 사회문화 및 대북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단체가 남북 교류를 추진하여 2017년 총 199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수리되었다. 북한은 민간의 접촉 및 방북에 대해 정부의 대북제재 참여와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면서도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재개 여지를 남겨두었다. 특히, 체육·종교·개발협력과 같은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에 관심을 보이면서 상황에 따라 재개 여지를 남겨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와 2010년 「5.24조치」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교역, 투자협력, 금강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 차례에 걸친 유관 부처 간 실무협약과 두 차례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협의를 통하여 '남북경협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을 제2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하여 2017년 11월 확정하였다.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였다. 개성 만월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60여만 점의 대규모 유물자료 중 9만여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는 남북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표제어를 대상으로 자체 작업을 지속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 체육행사를 계기로 남북간 체육교류도 추진하여 4월 평양에서 개최된 2018 여자축구 아시안컵 B조 예선에 우리 여자축구 대표팀이 참가하였다. 이후 6월 개최된 무주 세계태권도대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하고, 12월에는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최한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지원협력의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간교류 재개를 위해 산림·농축산·환경 분야 국내외 NGO들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34건을 수리하였고, 국내외 NGO들이 개최하는 산림·환경 분야 국제학술회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였다.

## 제1절 남북 교류협력 환경변화

### 1 교류협력 환경변화

####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독자제재 추진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엔, 미국 등 국제사회는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4차례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들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품', '금전', '기술'의 이전·협력 등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무기·사치품 및 석탄·철광석·섬유·수산물 등 대북수입 금지, 금융지원 금지, 경협사업 금지,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 선박 검색·차단·동결, 금융거래 금지 등이다.



유엔 대북제재 주요 내용

결의안	계기	주요 내용
2356호 (17.6.2.)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제재 대상 추가(개인 14명, 단체 4개)</li> </ul>
2371호 (17.8.5.)	ICBM급 '화성-14형'탄도미사일 발사 (17.7.4.~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석탄·철·철광석·해산물·납·납광석 전면 금수(원산지 무관)</li> <li>• 북한 해외 노동자 수 고용제한(제재위 승인시 예외)</li> <li>• 신규 북한과의 합작사업·협력체 금지(제재위 승인시 예외)</li> <li>• 제재위가 제재 선박 지정, 회원국은 입항 불허(제재위가 인도적 사유 결정시 예외)</li> <li>• 대금정산 금지, 일반 회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불가 및 명확화</li> <li>• 인터넷에 제재대상자 관련 특별공지(Special Notice) 발부 요청</li> </ul>
2375호 (17.9.11.)	6차 핵실험 (1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섬유 금수(원산지 무관, 유예기간 90일)</li> <li>•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금지(계약기간 만료시 연장 금지)</li> <li>• 신규 기존 북한과의 합작사업·협력체 금지(120일내 폐쇄)</li> <li>•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원유 공급량 현 수준 동결(결의 채택일 기준 과거 1년간 공급량 초과 금지) △정유제품 공급량 감축(상한 연 200만 배럴) 콘덴세이트(condensate) 및 천연가스액체(NGL) 공급 금지</li> <li>• 공해상 선박 검색 거부시 제재위가 등록취소 지정</li> <li>• 제재위는 결의상 어떤 조치도 필요시 사안별 면제 가능</li> </ul>
2397호 (17.12.22.)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17.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유류 공급 제한 강화(원유 공급 연 400만 배럴, 정제유 공급 연 50만 배럴로 제한)</li> <li>• 북한의 식료품·농산품·기계류·전기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의 수출 금지</li> <li>• 북한의 수산물 수출 금지에 조업권 거래 금지 포함 명확화</li> <li>•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대북 수출 금지</li> <li>•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송환</li> <li>• 해상차단 강화</li> <li>• 제재 대상 추가: 개인 16명, 단체 1개</li> <li>• 제재위는 결의상 어떤 조치도 필요시 사안별로 면제 가능</li> </ul>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들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지원 등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과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경제협력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목적이나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결의 상 규정된 어떠한 금지 조치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 하에 두 차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9.3.) 이후 우리정부는 해외 소재의 북한 은행 대표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8명을 독자적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11.6.)하였다. 북한의 ICBM급 탄도 미사일 발사(11.29.) 이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추가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12.11.)하였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주요 내용

조치	계기	주요 내용
11.6조치 (17.11.6.)	6차 핵실험 (1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제재 대상 추가 지정</li> <li>- 해외 소재 북한 은행 대표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8명(누계 단체 69개, 개인 97명)</li> </ul>
12.11조치 (17.12.11.)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17.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제재 대상 추가 지정</li> <li>-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누계 단체 89개, 개인 109명)</li> </ul>

한편,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 2일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H.R. 3364) 제정,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7차례의 대북제재 대상 지정 등을 통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일본, EU, 중국, 러시아 등도 금융·물품·운송 분야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제재를 확대하거나 구체적인 세부 조치를 시행하였다.

## (2) 대북제재 하에서의 교류협력 추진

정부는 베를린 구상의 기초 하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하고,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참가를 제안하는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등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정부는 민간교류 분야에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기초를 표명하였다. 그간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간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공헌해 왔다. 이에 정부는 거레말큰사전 공동 편찬과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지역 간 교류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자체남북교류협력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남북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여 동 대회를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에 따라 준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화올림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 공동 문화행사도 적극 발굴하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개성 만월대 유물 특별전시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2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 (1) 남북 민간교류 재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에 민간교류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7년 한해 간 남북 경제협력 분야 11건, 사회문화 분야 120건, 개발협력 분야 34건, 인도지원 분야 33건, 이산가족 분야 1건 등을 포함하여 북한주민 접촉신고 199건을 수리하였다. 이는 2016년 15건에 대비하여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접촉신고 39건, 신고수리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2017년 같은 기간 접촉신고는 207건, 신고수리는 193건으로 증가하였다.

### 월별 북한주민접촉 신고 및 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박근혜 정부(2016)								문재인 정부(2017)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접촉 신고	14	6	1	1	3	6	5	3	31	34	29	24	25	12	25	27
신고 수리	0	0	0	0	1	0	0	0	25	29	28	24	25	12	23	27

(출처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이 중 실제 북한과 접촉 시도를 한 경우는 총 120건이며, 북한은 이 중 73건(12월 31일 기준)에 대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응답해왔다.

한편 국제체육대회를 계기로 남북 간 체육교류도 진행되었다. 정부는 4월 강릉 「국제 여자아이스하키 대회」와 평양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6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등의 국제 체육행사를 계기로 우리 선수들의 방북과 북한 선수들의 방남을 지원하였다.

## (2) 교류협력 거버넌스 강화

정부는 교류협력 분야에서 민간부문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는 종교·체육·학술·경협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60여 회 개최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8차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11차례의 「정책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를 통해 교류협력의 제도화 등과 같은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방안의 도출을 지원하였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하여 국정과제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과제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참가에 대비하여 방남 행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였다. 또한 법무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 등 법·제도 분야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민간이 향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경색 시에도 남북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에는 교류협력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 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경협 및 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민간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정부가 직접 교류할 수 없는 영역에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참여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운영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의뢰하였고, 지자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수립하였다.

이에 더하여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차원적인 교류협력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되었다. 특히 UNESCAP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국제기구의 저개발국 지원 사례 등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개발협력 사업 동향을 파악하였다.

### (3) 교류협력 법·제도 등 시스템 개선

남북 교류협력 촉진과 질서유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6회에 걸쳐 정치권, 경제계, 법률 전문가,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정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남북협력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통일부 훈령 2건을 개정하였으며, 6차례의 보험제도 개선 실무회의 등을 통해 경협·교역보험 제도(안)을 마련하고, 경협·교역 보험 규정 및 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도 병행 추진하였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지속 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남북 간 합의서 및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준비도 지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개선하여 교류협력 추진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남북 출입경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에 대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 3 남북출입시설물 관리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제1·2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하였다. 이에 2003년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가 개통되어 3월부터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4년 12월 경의선·동해선 도로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다.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간 통행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군 초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2월 11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출입사무소는 육로통행 재개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정례적인 남북 출입경 훈련을 실시하는 등 언제든지 남북 간 출입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 출입경 훈련은 인원·차량의 실제 출입을 상정하고 통일부, 법무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군 등 10여개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승인조치, 인원·차량 심사, 검역·소독 등 출입경 전체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입경 관련 전산시스템, 심사장비 및 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언제든지 출입경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총 7회의 훈련(경의선 5회, 동해선 2회)을 실시하였다.





인원심사 출입경 점검



차량심사 출입경 점검

아울러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출입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 법무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군 등 13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남북출입사무소 운영협의회」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5회(경의선 83회, 동해선 22회)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출입경 관련 기관 간에 원활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육로(철도·도로)를 통해 남북간에 인원, 물자, 차량이 오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방문고객 대상으로 평화와 통일로 가는 현장체험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성인, 외국인 등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출입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도 남북출입사무소 방문객수는 13,564명에 이른다.

연도별 남북출입사무소 방문객 현황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인원	7,287	8,094	9,304	9,066	13,176	13,564	60,491

## 제2절 남북 경제교류

2010년 「5.24 조치」,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남북 간 경제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남북 경협을 재개에 대비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경협기업과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을 추진하였다.

### 1 남북경협기업 지원

북한의 우리 관광객 피격에 따른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와 2010년 「5.24조치」 시행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내륙 위탁가공, 일반교역, 금강산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이들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총 251개 기업에게 817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총 457개 기업을 대상으로 52억원 규모의 긴급운영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중단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유관부처 실무협약과 두 차례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협의를 거쳐 남북경협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에 발표하였다. 이 지원 방안은 11월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러한 남북경협기업 지원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함께 진행된 개성공단기업 지원 사례를 준용하였고,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남북경협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확인된 금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확인된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기간의 사업 중단으로 기업에 발생한 운영·관리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기업별로 투자와 교역 실적을 고려하여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회계기관을 통한 기업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민·관·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원심사평가위원회'도 참여토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경협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네 차례에 걸친 통일부 장관과 기업인 면담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방안이 결정된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기업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남북경협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기업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측 의견을 청취하였다.



통일부장관, 남북경협기업인 면담(7.4.)



남북경협기업인 대상 설명회(11.30.)

## 2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추진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2014년 10월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동력의 유지 등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백마고지에서 남방한계선까지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남북간 교통·물류기반을 조성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접경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 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2015년에 착공하여 2017년 말까지 설계 용역과 토지 매입을 진행하였다. 2016년 노반과 궤도 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2017년에는 월정리 역사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 전체 설계용역을 마쳤다. 또한 2016년에 보상비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완료하였다.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노선도



## 제3절 남북 사회문화교류

### 1 문화유산 교류

#### (1)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고려 황성 유적의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통해 민족공동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남북 주민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남북간 교류가 잠정 중단된 이후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교류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2017년에는 2007년 이후 개성만월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60여만 점의 유물자료 중 9만여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하는 사업을 완료하여 15%의 진척률을 보였다.

또한 고려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간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기간 중에 평창지역 특별전시회를 준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12월 1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12월말부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 (2)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원회’는 1900년대 이후 남북과 해외에서 사용

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이를 사전으로 편찬하기 위해 2005년도에 결성되었다. 2006년 1월 18일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가 설립되었으며, 총 25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에 수록할 약 30여만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는 한편 남북 간 표기법을 합의하는 등 통일 이후 언어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이후 2017년 말까지 남북공동편찬회의는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였다. 남북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표제어를 대상으로 교정·교열 작업과 말뭉치 정리, 삽화그리기 등 자체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78%의 사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북공동편찬 과정을 통해 구축한 자료를 ‘겨레말 웹사전’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웹사전 검색엔진 개발을 2017년 말 1차로 완료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남북언어 검색 엔진인 ‘남북기초생활 용어비교’ 스마트폰 어플을 공개하였다.



「평화로 2017」(10.13.~15.), 겨레말큰사전 홍보부스 운영

## 2 종교 및 문화·예술·학술 교류

남북 종교교류는 북한의 도발로 2016년 초 이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2017년 5월 이후 각 종교단체들은 서신 및 제3국을 통한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우리 종교계의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 총회(7.1.~4.)와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7.7.~8.)에 북한이 참가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관계자와 접촉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문화·예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장려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2017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북한 관계자 초청, 국악대축제 공연 협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남북 평화음악회 개최 등과 같은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교류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교류 및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9.2.~11.5.) 개최도 지원하였다.

학술분야에서는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지역회의 및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미팅(8.29.~30. 몽골)이 남북 등 7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화학기술 및 산업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국제화학 세미나'(12.19.~22. 중국 옌지)에도 남·북·중·일 4개국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또한 정부는 종교·문화유산·청소년 등 교류협력 분야별로 7차례의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교류협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정책 설명과 공감대 형성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2017 하반기 남북종교교류 실무협의회(12.13.)



제8차 남북문화유산교류 실무협의회(9.26.)

### 3 체육 교류

남북 스포츠 교류는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국제체육경기에 북한이 참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대회로 개최된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세계여자선수권대회 디비전Ⅱ 그룹A」 경기에 북한선수단 30명이 참가하였다. 선수단은 4월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4월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으며, 디비전Ⅱ 그룹A 경기는 한국, 북한, 호주, 네덜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이 참가하여 풀 리그로 진행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여자축구 대표팀은 4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8 여자축구 아시안컵 B조 예선에 참가하였고, 4월 7일 남북간 경기가 있었다. 선수단 41명과 방북취재단 10명 등 총 51명이 방북하였으며, 대회에는 한국, 북한, 홍콩,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이 참가하여 풀 리그로 진행되었다. 경기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렸다. 북한은 대회기간 동안 태극기를 경기장에 게양하고 한국 경기시 태극기 입장과 애국가를 연주하였으며 제한된 구역에서 태극기 응원도 허용하는 등 국제관례와 대회규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세계태권도연맹(WTF)의 초청으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국제태권도연맹(ITF)의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하였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리용선 ITF 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태권도시범단 32명이 6월 23일 방남하였다. 시범단은 6월 24일 개막식(무주), 6월 26일 전라북도 도청(전주), 6월 28일 국기원(서울), 6월 30일 폐막식(무주) 등 4차례의 시범공연을 펼쳤다. 그리고 합의를 통해 '9월 평양 태권도 대회'시 남한 시범단 방북, 평창을

림픽 합동 시범공연 추진을 발표했으나, 북측의 거절로 우리측 선수단 방북은 무산되었다.



여자아이스하키 대회  
(4.2.~8. 강릉)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  
(4.3.~24. 평양)



세계태권도대회  
(6.24.~30. 무주)

한편,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최한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가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한국 2개팀, 북한 2개팀, 중국 2개팀이 참가하였다. 한국에서는 강원도 유소년축구선수단 50명을 포함하여 남북경기 관람 등을 위하여 120여명이 참석하였고, 북한은 4.25체육단 30명, 여명축구단 30명 등 총 60여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 4 지방자치단체 교류

정부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기존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유지하면서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의 실국장이 참석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하여 9월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교류사업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통일·교류 협력 부문 역량강화를 위해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워크숍을 진행(11.23.~24.)하였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광역시 17개, 기초 39개)하고 있으며, 남북교류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799억 8,700만원의 기금을, 10개 기초 자치단체가 96억 5,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워크숍(11.23.~24.)

## 제4절 남북 개발지원협력

### 1 민간교류 재개

2017년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다수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이 있었다. 정부는 산림 분야 13건, 농축산 분야 14건, 환경·수자원 등 기타 분야 7건 등 총 34건에 달하는 개발협력 분야의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접촉신고를 한 민간단체와는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차원의 협의 상황 및 사업 수요를 파악하였다.

북한의 산림 복구 및 병해충 방제는 남북한 산림 자원 공동이용, 자연재해 공동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남북한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도 해외 동포가 운영하는 단체를 초청하여 북한의 산림 복구에 필요한 묘목·종자, 양묘장 조성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산림 분야 사업에 비교적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가 제의한 산림분야 사업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했고 남북강원도협력협회에서 제의한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도 완곡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농축산 및 환경·수자원 분야의 민간단체들도 그간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던 다양한 사업을 북한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국제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남북간 직접적인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사업 제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반면, 일부 국제 학술회의에는 참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 및 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기획하였다. 이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농축산·환경 등 전문 분야의 국제 학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별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구축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발협력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거래의 숲과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를 지원하였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는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 5명과 한국 전문가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몽골 등 5개국에서 온 24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북한의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 하에 한스자이텔 재단과 북한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습지·임업분야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였다. 캄보디아·중국·독일 등에서 많은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북한에서도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협력 추진도 검토하였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18년 10월 실시 예정인 「2018 북한인구총조사」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 공여를 요청하였다. 북한인구총조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서, 한반도 인구 규모 예측 및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3 개발협력 역량강화

정부는 향후 민간교류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역량강화 및 분야별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다.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  
(12.6.~8.)



습지·임업 분야의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워크숍(12.8.~9.)

우선, 3월에는 주요 개발협력단체를 대상으로 「북한개발협력 민관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017년 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산림 분야에서의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밖에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몽골 사막화 방지 및 산림 복원지역 현장견학을 통해 북한 산림복구 및 산림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역량강화 및 농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5월 24일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단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남북농업협력 민관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민관정책포럼의 후속으로 5월 31일 경기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농업 사업을 위한 현장 감각을 익히고자 하였다.



민관정책포럼(5.24.)



농업현장방문(5.31.)

환경 분야에서는 북한 핵실험 및 국내 지진 등으로 인해 백두산 화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백두산 화산 관련 민관 워크숍 및 현장방문을 추진하였다. 환경부,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지질자원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백두산 화산 연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 공동대응과 기후 변화 대비를 위해서라도 백두산 화산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남북 공동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남북 공동연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학술회의 등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또한, 남북 수자원 공동이용과 관련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북한의 급작스런 방류 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군남 홍수조절지, 필승교 등 지역을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목록을 논의하였다. 또한, 남북 수자원 공동이용 관련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통일부, 국토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로 구성된 「남북 수자원 공동이용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 4 중장기 계획 수립 기반 마련

정부는 개발협력사업의 중장기적 성격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다. 11월 21일 개최된 「북한 개발협력 로드맵 구축 세미나」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유관부처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해외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개발협력 추진시 국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협의하였다.

한편, 석탄 발전소의 노후화, 전력 인프라 부족, 발전용량 부족 등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북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남북 환경협력 방안 수립 등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준비하였다.

## 제5절 개성공단 피해지원

### 1 지원 대책 지속 추진

#### (1) 경과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되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한 다음 날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자산 피해지원 방안과 함께 금융·세제·고용 등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력사업승인(신고수리)을 받은 개성공단 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 2차례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입은 자산 피해에 대해 2017년에도 지원을 지속해 나갔다.

#### (2) 지원기준 및 실적

기업들이 입은 자산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정부가 기존에 운영해 온 경제협력사업보험,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사업 중단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존의 손실보조 제도를 보험제도로 정비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인 만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업이 신고한 총 피해금액 9,649억원 가운데 회계 법인이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피해금액은 총 7,861억원이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사업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율 90%, 지원한도 7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다. 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지원율 45%, 지원한도 35억 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기업들이 두고 온 원부자재, 완제품과 같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상 교역보험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당시에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역보험의 지원율 70%를 적용하고, 지원한도는 당시의 물동량 증가 상황을 감안하여 당초 지원한도 10억원의 2.2배인 2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생계 부담을 안게 된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804명에 대하여도 124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월 기준 임금의 6개월분을 산정한 것이며,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1개월분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7년 12월 말 현재까지 5,03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제협력사업보험금 2,945억원, 경제협력사업보험 미가입 투자자산에 대한 지원금 714억원,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금 1,248억원, 근로자 위로금 124억원이 지급되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접 피해지원

(단위 : 억원, 2017.12.31. 기준)

구 분	실태조사 신고금액	실태조사 확인금액	정부지원 결정금액	집행금액
투자자산(토지, 건물 등)	5,731	5,118	3,801	3,659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2,442	1,969	1,248	1,248
위약금	1,100	633	-	-
개성 현지 미수금	376	141	-	-
합 계	9,649	7,861	5,049	4,907

\* 근로자 위로금(804명) 124억원 포함 시 총 집행액은 5,031억원

\*\* 위약금, 미수금 등 간접적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

## 2 추가 피해지원 결정

2017년에는 피해지원 집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회는 지속적으로 정부 확인 피해금액에 대해 전액 지원을 요구하였다. 기업들의 경영 상태 또한 계속하여 악화되었다.

이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남북 경제협력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 조치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제협력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제협력 기업의 조속한 피해지원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다.

정부는 먼저 7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7월 19일 국무총리 현안보고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필요한 추가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약 4개월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부처 간의

견을 수렴한 끝에 10월 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열린 8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정부의 추가 지원은 2016년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보다 충실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지원 대상은 2016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303개 기업에 대하여 투자자산 144억원, 유동자산 516억원 등 총 660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지원 기준으로는 우선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의 경우 90%, 70억원 한도로 증액을 결정하였다. 유동자산은 다수의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핵심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2016년 실태 조사 결과의 반영이 미흡한 부분을 위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여 총 144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다. 확인된 피해 중 경제협력사업 보험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로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해 임대 자산 중 예산 계약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존 지원 항목 외에 추가로 토지이용권,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수단, 집기비용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추가지원 기준				
구분	기존 지원	추가 지원	추가지원 소요예산	
투자 자산	보험 가입	확인피해액 90%, 70억원 한도	-	-
	한도초과분	확인피해액 22.5%, 17.5억원 한도	-	-
	보험미담보 피해	-	확인피해액 45%, 35억원 한도	95억원
	보험 미가입	확인피해액 45%, 35억원 한도	-	-
	임대자산	'기계', '기타' 항목만 인정	전 항목 인정	49억원
유동자산	확인피해액 70%, 22억원 한도	확인피해액 90%, 70억원 한도	516억원	
합계	-	-	660억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 발표 이후, 통일부 장관은 기업인 면담을 통해 최종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 측의 동의를 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28일 제28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투자·유동자산 추가 피해지원(안)」을 의결하여 지원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들에게 지급절차를 안내하고 집행에 들어갔으며, 2017년 12월 말까지 총 96개 기업에 361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 3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

#### (1) 지원 현황

정부합동대책반은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 또한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자금 분야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681억원, 기타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4,552억원, 신규 및 특별대출을 포함하여 총 4,318억원을 지원하였다. 세제 분야에서는 총 1,534억원 상당의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 조치를 취하였다.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총 148개사에 대해 14억원 상당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30억원을 지급하였고, 휴업(휴직)수당 중 기업 부담액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0억원을 지급하였다. 또 실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24억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실적

분류	주요 대책	세부 지원내용	추진 실적
경협 보험 지원 및 자금 지원	남북협력기금 연장	•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681억원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상환 유예	• 공공·민간금융기관대출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중진공정책자금이자상환유예	• 대출 상환유예 4,552억원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출 및 금리우대	• 신규대출 2,711억원 • 금리인하 81억원
	5,500억 규모 특별대출	•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중진공 운영·시설 자금대출	• 특별대출 2,126억원 * 신·기보, 지신보 519억 포함

분류	주요 대책	세부 지원내용	추진 실적
세제 및 보험 지원	국세신고·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부가세신고·납부기한, 既고지세금징수·체납처분유예	• 납부기한 연장 1,400억원 • 체납처분 유예 11억원 • 징수 유예 21억원
	지방세신고·납부기한 연장	• 지방소득세등신고·납부기한, 既고지세금징수·체납처분유예	• 납부기한 연장 100억원 • 징수 유예 2억원
	세무조사 연기	• 조사 착수 원칙적 중단, 진행중인 경우 신청시 연기·중지	• 국세청 세무조사(21개), 지자체 세무조사(73개) 착수 중단
	고용·산재·건강 보험 감면 및 납기, 체납처분 유예	• 고용·산재보험은 입주·영업기업 대상 6개월간 30% 감면 • 건강보험은 개성공단 근무 직원에게 6개월간 50% 감면	• 148개사(14억원)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 경감유지 고시개정(3.16), 보험료 경감 748명
정부 조달 판로	정부조달 납기 연장	• 납품연기 요청시 즉시조치 및 관련 제재 면제	• 계약진행업체(3개) 안내 공문 발송(2.17), 납기연장 조치(2개사)
	정부조달 참여 우대	• 정부입찰·우수제품 심사 한시적(1년) 가점 부여	• 구매적격심사기준 개정·시행(3.2) • 우수물품지정규정 개정·시행(3.9)
생산 기반	국내 대체공장 신설 지원	• 지식산업센터(산단공) 대체 공장 배정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 9개 업체 입주계약 체결 • 국내 투자한 20개 기업투자안 심의 및 보조금지급결정(403억) * 수도권(147억) 포함
	창고이용 지원	• 공동물류센터(산단공)등물류창고이용지원(1년무상, 2년50% 할인)	• 남동물류센터내임대가능창고물량파악및임대료할인(5.5%)협약 완료
고용 안정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1일 4.3만원(180일) • 협력기금 활용 추가지원 * 1개월 65만원(限)	• 고용유지 931명(30억원) 지원 * 주재원 404명, 본사근로자 527명 • 휴업(휴직)수당 1,714명(10억원) 지원
	실업급여, 긴급생계비 지급	• 실직한 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미수급 생계곤란 실직자에 생계비 지원	• 실업급여 434명(24억원) 지급 • 긴급생계 10건(27백만원) 지원
	취업 지원	• 훈련, 알선 등 재취업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 취업알선 77건(구직 54명) • 취업성공패키지 11명 참가 • 외국인고용 106명 지원

(2017.12월 말 기준)



## (2) 추가 경영정상화 지원

### 1) 수도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정부합동대책반 지원 대책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마련되었으나 지원이 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되어 2016년까지 수도권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실적은 4억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기업들의 희망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에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화성, 고양, 인천시 등의 협조를 얻어 수도권에서 4개사에 17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개사에 대한 72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또한 심의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 12월 말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147억원을 포함하여 총 403억원이 지급되었다.

### 2) 특별대출 상환 유예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및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대출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7년 2월 13일부터 해당 대출의 원리금인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164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특별대출 117억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단 중단 이후 만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거래선 이탈과 매출 감소, 자금 압박, 영업이익 하락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 지원대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환기일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합동대책반에서 확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지원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시행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19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 신규 고용을 특별히 허가하였다.

### (3)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중심으로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실직한 개성공단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준비 클리닉을 개최하여 해외·국내 기업에 재취업을 알선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는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고 상품을 실직한 근로자가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상생 희망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국내외 주재원 취업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5개 권역에서 개최하였고, '주재원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힘썼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형별 상담을 지속하였다.

그 밖에도 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한 영업기업 맞춤형 재도약지원 사업, 개성공단기업 이력관리 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남한에서의 영업기반이 없는 영업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서울시 등이 연계하여 물품 조달 지원도 진행하였다. 경기도청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개성공단 기업 특판전을 개최하고,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개성공단 기업 생산제품 특판전을 개최하였다.

해외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상하이 패션박람회(CHIC), 하노이 박람회, 홍콩 패션위크, 호치민 박람회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대체공장을 건립한 41개사에 대해서는 건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월말까지 132건의 건축기술을 지원하였다.



경기도 벚꽃축제 개성공단 기업 특판전



성남시청 개성공단 기업 특판전

# UNIFICATION WHITE PAPER



03

## 인도적 문제 해결

03

제1절 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인권



### 3장 인도적 문제 해결

정부는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특히 인도적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우선하여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베를린 구상」과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를 북한에 거듭 제의하여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대응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산가족 사망 시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DB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산가족 기록을 보존하고 남북간 교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도 추진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1세대 및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위로행사와 정책설명회를 확대 개최하였고, 이산가족 기록물을 수집·전시하고 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도 구축하였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과 주선단체 지원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왔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가족 서신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지속적 활동을 통해 2017년에는 「6·25전쟁 납북진상조사 보고서」를 편찬하였고, 「국립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준공 및 개관하여 위원회의 핵심 사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취약계층 대상 지원,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 민간단체 차

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보장하였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공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북지원 사업의 중요한 협력주체인 민간단체, 전문가와의 거버넌스도 강화하였다. 지원 분야별 워크숍 개최, 민간단체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해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7년에는 「대북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도지원 단체와 국민들의 대북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북한인권 개선’을 포함하고,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정책방향 설정에 노력하였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였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계속 동참해오고 있으며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 및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주로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국제적 인권조사 기준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한 조사기록은 매 분기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였다.

## 제1절 이산가족

### 1 이산가족 현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3만 1,344명이다. 이 중 7만 2,307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5만 9,037명이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현황

#### ① 연령별

구분	90세 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 이하	계
인원(명)	11,183	25,266	13,761	5,093	3,734	59,037
비율(%)	18.9	42.8	23.3	8.7	6.3	100

#### ② 출신지역별

구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수(명)	13,123	7,195	4,291	6,241	1,841	2,193	1,043	23,110	59,037
비율(%)	22.2	12.2	7.3	10.6	3.1	3.7	1.8	39.1	100

#### ③ 남녀별

구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36,740	22,297	59,037
비율(%)	62.2	37.8	100



④ 거주지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수(명)	16,132	2,782	1,372	4,904	547	1,298	464	17,524	3,538	1,900
비율(%)	27.3	4.7	2.3	8.3	0.9	2.2	0.8	29.7	6.0	3.2
구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계	
인원수(명)	1,800	1,008	825	1,743	1,381	547	181	1,091	59,037	
비율(%)	3.1	1.7	1.4	3.0	2.3	0.9	0.3	1.9	100	

**2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 구축 및 공감대 확산**

(1)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영상편지

정부는 이산가족의 사후에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보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2만 1,914명의 희망자를 파악하였고, 2013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전자 검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2014년에는 1,211건, 2015년 1만 274건, 2016년 1만 30건, 2017년 1,178건의 유전자를 채취·검사하여 현재 총 2만 2,693건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15년에는 이산가족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그 동안 민간 검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던 유전자 검체(혈액, 타액, 모발 등)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함으로써 유전자 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2005년 국가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였고, 2008년에는 남북간 영상편지 교환 합의에 따라 각각 20편의 영상편지를 교환하였다. 그 후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간 서신 및 영상편지 교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만 4,027편을 제작하였고, 2017년에는 1,500편을 추가 제작하여 총 1만 9,500여 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영상편지는 현재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 중이다. 인터넷 공개를 동의한 영상편지는 「남북 이산가족찾기」 사이트와 네이버TV 캐스트 등에 공개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한측 가족에게 영상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2) 이산가족 문제 공감대 확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200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는 초청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전까지 연 5회 개최하던 이산가족 초청행사의 규모와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총 15회에 걸쳐 지역별 순회 초청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출신지역별 이산가족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국립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기상봉자 및 남북피해자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대상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1만여 건을 수집하고, 이 중 125점을 선별하여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획전시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집된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산가족 초청행사(9.14.~15.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이산가족 기록물 기획전시 개막식 개최(11.29.)

### 3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정부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에는 민간교류경비 정부지원금을 현실화하고 교류 주선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인상하였다.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2.3.)하여 지원 금액기준을 상향한 결과 현재 민간 차원에서 생사확인 시 300만원, 상봉시 600만원, 서신교환 등 교류 지속시 80만원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민간 차원에서 생사확인 10건, 상봉 1건, 서신교환 46건, 기타 1건 등 총 58건의 교류가 성사되었으며, 정부는 이 중 14건에 대해 3,4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였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누계
건수	96	231	314	279	287	466	303	289	201	151	103	54	23	12	16	28	12	10	10	14	2,899
지원금	67	163	279	349	440	692	364	252	235	172	114	76	22	12	16	51	23	16	18	34	3,395

한편, 북한 천도교청우당 前중앙위원장의 가족이 모친 사망 1주기(11.23.) 추모행사 참석과 성묘 방문을 위해 북한방문을 신청한데 대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방북을 정부가 승인함에 따라 11월에는 이산가족이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또한,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9척과 선원 37명을 구조하여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해상 및 육로로 송환하는 등 남북 주민들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10월에는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 '391홍진'호와 선원들이 북한지역에 입경하여 나포되었다가 10월 27일에 송환된 바 있다.

##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 1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 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조창호 소위의 탈북·귀환 이후 2017년 12월 말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탈북·귀환하였다.

납북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6·25 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전후 납북자)로 구분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이며, 그 중 3,319명이 귀환하였다. 귀환자 중 3,310명은 북한이 송환하였으며, 9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 중 자진 탈북·귀환하였다. 2017년 12월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후 납북자 현황 (추정)

(단위 : 명)

구분	어선원	대한항공 (KAL)납치	군·경	기타		계
				국내	해외	
피랍자	3,729	50	30	6	20	3,835
귀환자	송환	3,263	-	-	8	3,310
	탈북·귀환	9	-	-	-	9
미귀환자	457	11	30	6	12	516

북한은 2013년 김정욱 선교사에 이어 2014년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씨를 억류하였고, 이에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3명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2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출범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정부에서 발간된 납북자 명부를 바탕으로 6·25전쟁 납북자의 규모를 10만 명 내외로 추정하였다. 위원회는 5,505건의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중복 및 취하된 신고를 제외한 5,375건을 심의하였으며, 그 중 총 4,777건을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하였다.

또한, 납북피해 신고 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 결정과 함께 6·25전쟁 납북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발굴·수집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납북피해 규모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였다.

2010년 12월 13일 위원회 출범 이후 2016년까지 국내외 기록에 대한 조

사활동을 통해 총 5,200여 건(30여만 쪽 분량)의 남북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다양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또한 2017년 5월에 「6·25전쟁 남북진상조사보고서», 「6·25전쟁 남북자명단」을 편찬 및 배포하였으며, 6월 12일 활동을 종료하였다.

### 6·25전쟁 남북자 심의 현황

(단위 : 건)

구분	상정	심의 결과		
		결정	비결정	판단 불능
남북결정자	5,375	4,777(88.9%)	138(2.6%)	460(8.5%)

한편, 6·25전쟁 남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남북피해기념관 건립사업은 2016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1년여 만인 2017년 9월 건립(파주시 임진각 부지 내)을 완료하였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11월 29일 「국립 6·25전쟁남북자기념관」 개관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국립 6·25전쟁남북자기념관 개관식(11.29.)



국립 6·25전쟁남북자기념관 내부 전경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 등 계기 때마다 북한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왔다. 2000년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군포로 및 납북자 112명에 대한 생사확인이 이루어졌으며, 54가족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납북피해자의 권익향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법정단체인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권역별 납북피해가족 위로 행사, 납북자 세미나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정부 주관의 납북피해가족 초청 위로행사 개최와 납북자 가족 위로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피해위로금 등 약 150억원을 납북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신청	지급 결정	지급액(백만원)
피해위로금	429	417	12,958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보상금	13	2	181
계	451	428	14,912

또한, 정부는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인도적·반인권적 행위임을 지적하고, 억류자의 즉각 석

방과 송환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였고,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억류자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명절 등 계기 시에 억류자 가족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정부의 송환노력과 의지를 설명하였다. 2017년에는 총 3회에 걸쳐 억류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 제3절 인도적 지원

### 1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 지속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북한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결정하고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였다.

#### 대통령, G20 정상회의(7.8.)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7년 UN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G20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 등을 통해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의료시설 지원과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인도지원 제의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물자 반출 등 실제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2017년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11억 원으로 지원 물자는 1개 단체가 보낸 결핵 의약품 등이

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공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이 우리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온 데에 대해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기구 공여 방침을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엔아동기금의 아동 및 임산부 백신과 필수약품 지원, 영양실조 치료 등 모자보건 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실제 공여는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으로 이월되었다.

정부의 UNICEF·WFP 공여 계획 세부 내용

기구	사업 내용	금액
UNIC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임산부 백신, 필수약품, 영양실조 치료</li> <li>- 백신 : 1세 미만 아동 대상 결핵, B형 간염, 홍역, 소아마비 등 백신 접종, 임산부 대상 파상풍 백신 접종</li> <li>- 필수약품 : 설사, 호흡기 감염병 등 아동 필수약품 제공</li> <li>- 영양실조 치료 : 중증급성 영양장애 아동 영양실조 치료, 임산부·수유부 영양소 제공</li> </ul>	350만 달러
W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임산부 영양 지원</li> <li>- 탁아시설·소아병원 아동, 임산부 및 수유부 대상 단백질·미네랄·비타민 등을 혼합한 슈퍼시리얼, 슈퍼비스킷 제공</li> </ul>	450만 달러

## 2 인도적 지원 추진 역량 강화

### (1) 대북지원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들의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분야별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인도지원 분야별 민간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4월에서 11월 사이에 총 7회에 걸쳐서 진행된 워크숍에는 보건 의료, 영양지원, 감염병, 재해구호, 장애인 등 5개 분야의 3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민간단체들은 워크숍을 통해 대북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지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밖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와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였다.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가 주관하여 6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한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8월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등이 주관한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지원하였다.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대북지원 사업에 필요한 실무와 전문 지식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대북지원 사업 경험이 적은 각 단체의 젊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국내외 대북지원 사업주체들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대북지원 민간단체 및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또한 정부는 인도협력 정책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협력 분야 35개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12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와 대북지원 사업을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세계식량계획·유엔아동기금 서울사무소와의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데, 11월에는 통일부 장·차관이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였다.

## (2)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정부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들이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지원사업의 상세내용을 분야별로 조사하여 표준화된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한편, 대북지원 통계 분류체계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향후 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 대북 인도지원 사업 관련 내부 DB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국민 웹페이지를 신설한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거쳐 201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대국민 웹페이지를 통해서 대북지원 사업 절차 안내, 국내외 대북지원 통계, 관련 북한 정보 및 자료, 대북지원 사업자 신청, 기금 공모시 신청 등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제4절 북한인권

### 1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을 포함하고,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방향 아래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힘입어 북한도 2017년 5월에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등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부분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완비되지 못했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2017년 1월 24일에는 북한인권법 상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단 출범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창립 이사회를 거쳐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6조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일부 차관 주재로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3차례 개최(1.20, 3.7, 9.19.)하였다. 회의에서는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정책협의회(9.19.)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9.22.)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기본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북한 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3차례 개최(1.24, 3.20, 9.22.)하였으며, 그 외에도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협의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17~2019)」을 4월 25일에, 「2017년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은 9월 29일에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3개년 계획인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하고 북한인권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7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그 추진 전략으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요구와 인도적 관여의 병행 추진, 민간과 당국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2017년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 추진과제

과제명	주요 내용
1.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기록·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 실태조사 공신력 강화</li> <li>• 정부 차원의 조사·기록체계 확립 및 자료 이관</li> <li>• 실태조사 자료 축적·보관 시스템 마련</li> </ul>
2. 북한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민간 지원 허용, 국제기구 공여</li> <li>• 인도적 실태조사·연구 및 「대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li> <li>•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메시지 전파</li> </ul>
3.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상봉 및 성묘방문 등 성사 노력</li> <li>• 향후 이산가족 교류 대비 영상편지, 유전자검사 사업 등 추진</li> <li>•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및 우리 억류국민 석방 노력 지속</li> </ul>
4.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 통일교육원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교육 협력체계 구축</li> <li>• 교육 콘텐츠 개발·전파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li> </ul>
5. 다자 및 양자 차원 인권외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국제기구 등 다자차원, 미국 등과 양자차원 협력 지속</li> <li>• 해외체류 북한주민 보호 노력 지속</li> </ul>
6.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조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속 노력</li> <li>• 초기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채용, 내규 제정, 계획수립</li> <li>• 안정화 후 본격 활동: 인권·인도지원 실태 연구, 정책대안 개발</li> </ul>
7. 정책 추진 협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및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li> <li>• 재단을 중심으로 민·관 간 협업체계 구축</li> </ul>

아울러, 북한인권 관련 단체와의 민·관 간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단체는 총 34개로서, 매년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진행하는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실태조사, 교육, 캠페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2 국제사회와의 협력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엔은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주민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2017년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5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무투표로 채택(3.24.)되었다. 결의에는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는 2016년 유엔 총회 결의 주요 내용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북한인권 침해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 전문가 그룹’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권고한 북한인권 관련 유엔 메커니즘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제72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무투표로 채택(12.19.)되었다. 총회 결의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 접견과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5월에 이루어진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최초 방북 허용 등과 같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14년 12월 22일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 이후 4년 연속 북한인권 토의를 개최하여 안보리 내에서 북

한인권 논의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사무소(서울) 등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 (1) 현황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28일에 설립되었다. 기록센터의 설립으로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기록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북한인권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제인권 메커니즘과의 연계 및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 인권사무소(서울)의 협조를 받아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인권조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관 교육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조사관 대상 심리상담 등 인권 조사과정에서의 심리소진 방지를 위한 활동도 포함되었다.

또한, 조사·연구·보존·발간 등 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 조사 자문단」을 5개 분야(학계, 법조계, 북한인권 활동가, 조사 전문가, 심리치료 분야) 15명으로 운용하였고, 국내외 인권조사·기록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소통의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여 자문 내용을 업무

에 반영하였다.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2월)·前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2월, 4월)·캄보디아 디씨캠(DC-Cam) 대표(7월)·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12월)과의 면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록센터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인권 조사·기록 방법론을 확립·적용하고, 분야별로 북한인권 실태를 점검하였다.

체계적인 북한인권 조사 및 관리·분석을 위하여 기록센터는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2018년 구축될 「북한인권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반영하였다.

8월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에는 기록센터가 7개월 동안 조사한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었다. 9월에는 북한인권 조사를 위한 기록센터의 업무추진 경과와 조사원칙 등의 내용을 담은 1주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북한인권 조사자문단 제2차 회의



독일 독재청산재단 아카이브 방문

## (2)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조사·기록

기록센터는 2017년 981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인권 관련 문헌연구와 관련 정보수집도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971명: 여성 779명, 남성 192명)과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조사기록은 총 428건으로, 기록 원본은 법령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분기별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록 작성 현황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비고
조사대상자(명)	256	298	251	176	981	
조사기록(건)	105	140	110	73	428	4분기 기록은 '18.1월 이관 예정

기록센터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문답서 등을 작성하였다. 문답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기록 검토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 결과 및 문답서 기록은 조사종결 직후 보안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1년간의 조사 활동을 토대로 설문 등 조사절차와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였다.



기록센터가 2017년에 조사한 조사대상자는 여성이 80%, 양강도·함경북도 출신이 약 81%를 차지했다. 조사항목 중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분에 의한 차별 등이,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 근로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로 강제북송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성폭행·강제낙태, 공개처형 목적 등에 관한 증언이 수집되었다. 그 밖에 교육권 실태에 관한 교사의 증언, 건강권 및 장애인 실태에 관한 의사의 증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이 북한에서 받는 사회적 차별에 관한 진술, 기타 직군별 경험자의 진술 등이 수집되었다.

# UNIFICATION WHITE PAPER





## 04 남북대화

# 04

제1절 남북대화 추진

제2절 남북회담 역량 강화



## 4장 남북대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재정립'을 100대 국정과제,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을 실천과제로 포함시키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공조 하에 제재와 압박을 최대로 강화하여 대응하되, 이러한 노력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각국과의 정상회담과 국제회의 참석 계기에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광복절 경축사와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대화 단절 상태가 계속되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정부 출범 후 9회, 11발)하고, 9월에는 제6차 핵 실험까지 감행하며 도발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 병행 불가, 민족공조를 주장하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였다.

정부는 남북대화 단절 상황에서 언제 남북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였다. 분야별 모의남북회담, 회담운영 절차 모의 훈련, 분야별 기초 참고자료 작성 등 회담개최에 대비하는 한편, 여러 자문단도 운영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인적 기반 강화 측면에서도 남북회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회담 담당관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남북회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남북협상포럼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남북회담 분야에 장기 근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절 남북대화 추진

2017년 상반기는 대화의 계기를 찾기 힘든 시기였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조하고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및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한편,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며 남북 대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3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정부도 3·1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기조를 강조하며 강경정책을 유지하는 등 남북관계 전환의 동력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남북 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북한은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다양한 계기를 통해 대북정책 구상을 밝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하였다.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6월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7월 6일에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5대 기

조를 밝히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과제로 10월 4일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통한 평화올림픽 개최,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 재개를 제시하였다. 이어 7월 17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정부는 7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과 서해 군통신선의 조속한 정상화도 북한에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신청자의 63%가 80대 이상인 상황에서 매년 3,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남북군사당국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제의(7.17.)

그러나 우리 회담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남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보다는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강대강대결 국면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8월 9일에는 전략군사령관이 탄도미사일을 통한 궤포위사격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갔다. 특히 북한이 9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발언(“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에 대해 9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언급하여 강경 일변도의 행태를 보이면서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또한 북한이 11월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부성명으로 ‘화성-15형’ 발사 성공과 국가핵무력 완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 4일에는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한미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9월 15일에 이어진 북한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7일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11월 29일 북한이 또다시 화성-15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 포기 및 추가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진 29일과 30일 두 차례의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과 대북 최대압박 조치를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하여 한반도에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9월 중 이어진 독일(4일), 러시아(6일), 몽골(6일), 프랑스(11일), 호주(11일), 영국(20일)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및 전화통화를 통해 이러한 제재와 압박의 강화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함임을 밝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다”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은 11월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2월 14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 4대 원칙에 합의함으

로써 대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5대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통일부 장관도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비핵화 자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그 전이라도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되, 대화의 문을 열고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 제2절 남북회담 역량 강화

### 1 남북회담 상시 대비태세 확립

정부는 남북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남북회담 준비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야별 모의남북회담, 회담 운영절차 모의 훈련을 개최하여 회담 과정을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모의 체육회담, 모의 경제회담 개최를 통해 실전감각을 유지하고 대북협상력을 제고하여 회담전략을 보완·발전시켰다. 특히 실제 회담 개최 시 회담에 참여하는 부처, 기관도 참여시킴으로써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회담 운영차원에서도 지난해 정리된 남북회담 프로토콜을 실제 적용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회담 전반에 걸쳐 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의남북회담 개최

이와 함께 회담 개최 시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단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군사, 경제, 인도·사회문화 등 회담 분야별·의제별로 기초 참고자료도 정리하였다. 의제별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쟁점, 양측 입장, 대책 등을 정리하여 회담 개최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북 간 기존 합의 중 미이행 사항도 점검하여 추가 의제 개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체를 운영, 남북회담 개최에 대비한 상시 자문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실제 남북회담을 수차례 경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의 북한대표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회담 개최 시 사안별로 즉각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회담이 없을 때도 모의회담 참여 및 지도 감독을 통해 경험을 전수하여 회담 개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회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남북회담 분야 원로들이 참여하는 비상임자문회의도 운영하였다.

한편, 남북회담 기록물 관리와 보존의 체계화 및 현행화를 통해 남북회담 사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3월에는 회담사료 및 정보시스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회담 사료를 수집·정리하였으며, 2016년부터 진행된 회담사료 생산 및 보유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해 사료 1,017건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등 자료 관리 작업도 충실히 진행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리모델링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내에 사료전시관도 설치·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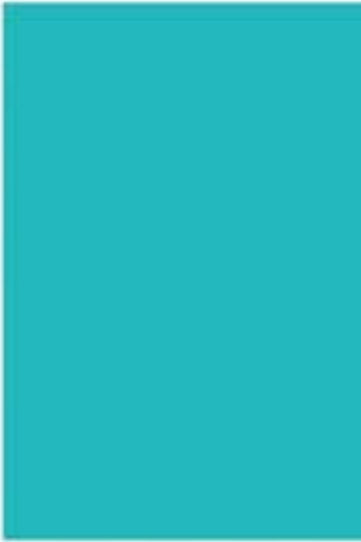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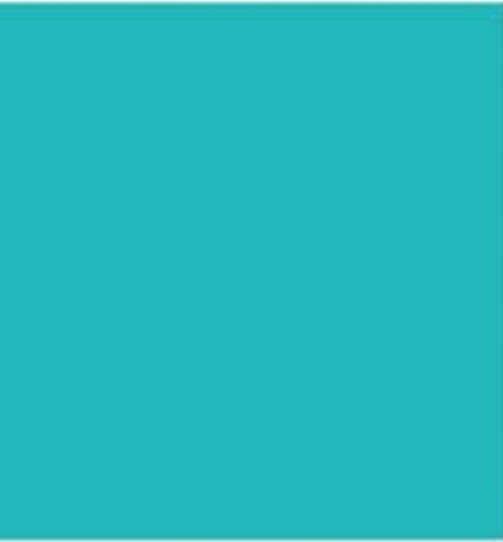
## 2 회담 전문성 강화

정부는 회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우선, 인사 제도 측면에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사처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일반적인 순환근무와 달리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토록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남북회담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전문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하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 도입한 「대북협상 전문직위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발전시킨 「남북회담 담당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담당관들이 전문성과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기본교육에서 심화교육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 회담 의제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일부 및 유관부처 관계 공무원들이 장차 남북회담 대표로 나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회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남북회담 진행상황을 경험하고 협상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과 같이 새롭게 제기된 분야에 대한 의제 개발도 추진하였다.

또한 남북회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능력 개발과 대북협상력의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남북협상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 UNIFICATION WHITE PAPER



05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05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제2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제3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제4절 북한이탈주민 자립 기반 마련

제5절 북한이탈주민 협력체계 구축



## 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11월을 기점으로 3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정책’ 방안을 2016년 11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또는 ‘자립·자활’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와 융합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에서 생애설계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장기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 전반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거지원금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산형성제도를 개선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지표로 반영하도록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내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독려·확대해 나갔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 또한 자녀양육 가산금 신설, 이중 언어 강사 배치 확대를 통해 강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통일문화센터’개관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그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 전문가, 권역별 세미나 개최(서울, 부산, 대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연수 등을 통한 경력 개발, 청소년의 학업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전원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합동조사, 보호결정 과정을 거쳐 하나원에서 기본 사회 적응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사회로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이 협업하여 취업지원, 자산형성지원, 교육지원 등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흐름도

###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시 관계 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 국내 입국

### 합동조사

- 입국 후 국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 하나원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6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기초 직업교육 등
-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후 거주지 전입

##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 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자산형성지원: 미래행복통장
- 교육지원: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 등 민간참여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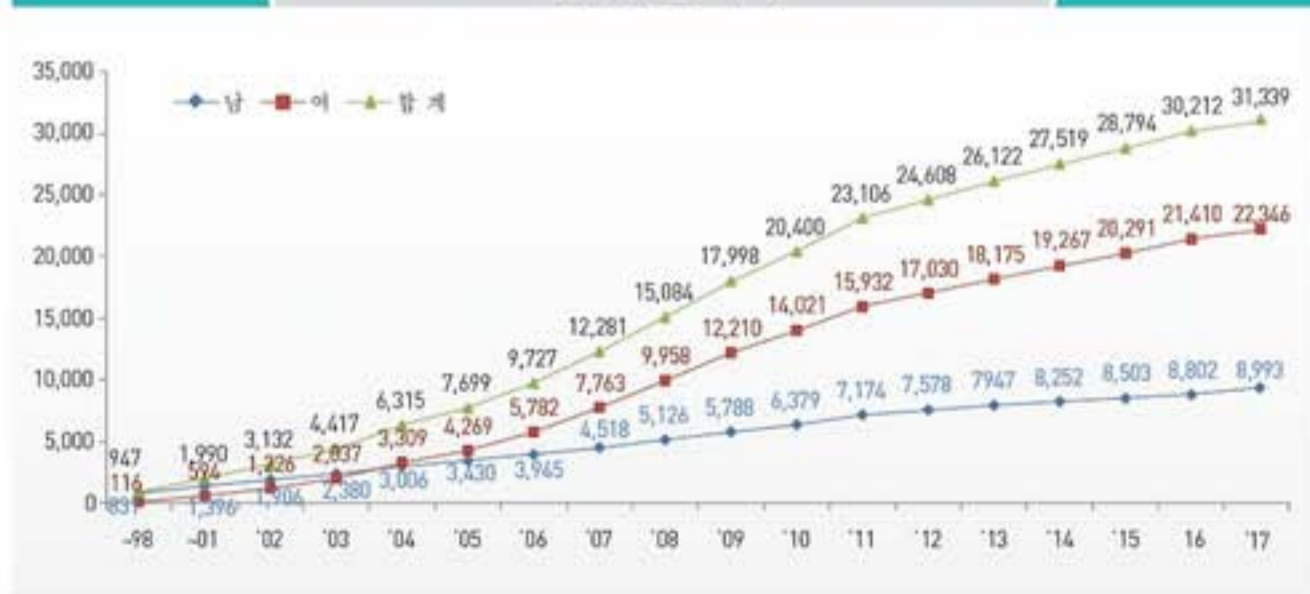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세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연간 1,500명 대 이하의 입국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 1,339명에 달한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 %)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남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8,993
여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22,346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31,339
여성 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71%

입국인원 누계



여성 입국자 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 입국자 수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입국자의 약 71%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경제적 어려움(52.7%), 동반 탈북(16.4%), 주변 권유(11.8%), 체제불만(6.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입국 현황은 입국 당시 30대가 2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 적응력이 높은 20대와 30대 입국자가 전체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 입국 당시 연령

(2017.12월 말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36	1,607	2,481	2,068	1,321	515	329	8,957
여	626	1,969	6,383	6,925	4,045	1,217	940	22,105
합계	1,262	3,576	8,864	8,993	5,366	1,732	1,269	31,062
비율	4.1%	11.5%	28.5%	29.0%	17.2%	5.6%	4.1%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입국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은 무직·부양자가 46.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노동자가 38.5% 비율을 보이고 있어, 2개의 직업군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중·고등학교 학력이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은 16.5%로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80%로 대부분이다. 출신지역은 함경북도 61%, 함경남도 9%, 양강도 15%로 함경도·양강도 출신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 직업별 입국자 현황

(2017.12월 말 기준)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학생 등)	기타	계
남	398	662	3,918	3,148	75	78	207	469	2	8,957
여	126	110	8,055	11,413	1,212	191	477	520	1	22,105
합계	524	772	11,973	14,561	1,287	269	684	989	3	31,062
비율	1.7%	2.5%	38.5%	46.9%	4.1%	0.9%	2.2%	3.2%	0.0%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 학력별 입국자 현황

(2017.12월 말 기준)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소학교 (인민 학교)	중학교 (초급, 고급)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복)	기타 (불상 등)	계
남	415	135	759	5,452	771	1,026	353	46	8,957
여	398	194	1,330	16,236	2,212	1,117	492	126	22,105
합계	813	329	2,089	21,688	2,983	2,143	845	172	31,062
비율	2.6%	1.1%	6.7%	69.8%	9.6%	6.9%	2.7%	0.6%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해당 학력별 재학·중퇴자는 포함

### 출신지역별 입국자 현황

(2017.12월 말 기준)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불상 등)	계
남	218	66	1,304	66	439	360	403	758	4,772	265	173	44	89	8,957
여	372	78	3,452	146	607	463	314	1,973	14,138	185	264	30	83	22,105
합계	590	144	4,756	212	1,046	823	717	2,731	18,910	450	437	74	172	31,062
비율	1.9%	0.5%	15.3%	0.7%	3.4%	2.6%	2.3%	8.8%	61.0%	1.4%	1.4%	0.2%	0.5%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은 제외

## 제2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전원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합동조사, 보호결정 과정을 거쳐 하나원에서 기본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사회로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이 협업하여 취업지원, 자산형성지원, 교육지원 등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1 사회적응 기본 프로그램

2017년 하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은 1,221명이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사회적응교육의 목표는 정서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 등이다. 이 교육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직업교육,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생애설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사회적응교육 정규 프로그램

**교육목표 :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51시간)

- 심리검사·상담
- 건강검진, 진료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공동103시간/특화70시간)

- 적성검사, 진로지도
- 진로설계 프로그램
- 기초직업적응훈련



12주  
406시간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 역사·문화·생활법률  
현장체험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공동97시간/특화70시간)

- 정착지원제도 안내
- 정착의지 함양 교육

초기 정착지원  
(58시간)

- Life-Plan 종합안내
- 인생 전반 5대 분야(재무, 가족,  
취업, 학업, 건강)  
Life-Plan 설계

생애설계 프로그램  
(27시간)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363시간) 언어, 영어, 운전, 컴퓨터, 노래교실, 부모교육, 가족면회(주말) 등

2017년에는 생애설계(Life-Planning) 교육 과정을 신설하였다. 생애설계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능력 함양을 위해 취업, 재무, 가족, 학업, 건강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목표와 실행방안을 교육생 스스로 수립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먼저 정착한 선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을 듣고 상담할 수 있는 멘토링 과정도 운영하였다.

## 2 진로 · 우리사회 이해 교육

### (1) 진로 교육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초 직업 적응훈련», 「진로상담»,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의 기초 직업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하나원 입소 초기에 개인별로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각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교육생이 미용, 기능, 복지 등 15개 분야 직종 중 6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기초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극 형식의 「직장에절 교육」,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 정착과 연계될 수 있는 「진로상담」, 취업분야 「생애설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생애설계 프로그램」 교육과정 중 개인이 작성한 활동지는 하나원 수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선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경험을 듣고 취업 관련 상담도 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하나원 직업교육 실적

(단위 : 명)

구분	수료 인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성	1,351	1,002	843	1,018	785	904	807
남성	546	361	254	262	168	198	150
계	1,897	1,363	1,097	1,280	953	1,102	957

## (2) 우리사회 이해 교육

정부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민주시민 프로그램」,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준법 교육」, 「시장경제 이해」 및 「사회보장제도 이해」 교육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 분야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사회의 가족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1박2일 가정체험」, 대중교통 이용, 관공서 방문 경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도시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이웃을 돕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봉사활동 - 홀몸어르신 반찬지원

### 3 아동·청소년 교육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들학교에서는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초등반 아동들은 하나원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는 하나들학교에서 기초학습,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공동체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들학교의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 파견교사 등 총 14명의 교사와 외부강사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 제3국 출생 아동을 동반한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말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령·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확대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들학교에서 3개월 간의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진학지도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일반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등으로 진학하고 있다.

한편, 탈북 청소년과 일반학교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안성 소재 안법고등학교, 가온고등학교와 남북 청소년 어울림 행사를 2016년에 5회, 2017년에는 8회 개최하였다. 어울림 행사를 통해 상호 학교 방문과 토론·발표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능력과 남북 청소년 간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연도별 탈북아동·청소년 교육생 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유치반	24	14	19	53	54	63	70	69	42	37	28	28	25	36	562
초등반	139	74	97	104	107	142	118	179	124	98	87	49	46	43	1,407
청소년반	160	111	169	232	276	220	193	198	113	106	90	68	86	116	2,138



#### 4 초기 건강관리 교육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1차 의료 기관으로 의사, 간호사 등 24명의 의료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안성(본원) 하나원은 내과·치과·한방과·산부인과·정신과를, 화천(분원) 하나원은 내과·치과·한방과·신경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원에서는 1차 진료, 예방접종, 암 검진, 보철치료, 보건교육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검사와 입원 수술치료가 필요한 2·3차 진료는 인근 협력병원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열린치과 봉사회가 안성 본원 및 화천 분원을 주 1회 방문하여 치과 보철 진료를 하도록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역사회 의료 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대구·경북 지역 거점병원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의 33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총 58개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치과 진료를 돕기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치과의사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역사회로 편입된 결핵환자가 모두 완치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복약지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22명 모두가 결핵이 완치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민관 협력



하나원-대구가톨릭병원 간 협약체결



북한이탈주민 치과치료 지원금 기부

하나원 심리 상담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정서안정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 입소 후 모든 교육생에게 북한이탈주민용 간이 심리상태검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교육생을 선별하여 심리 상담을 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MBSR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 호흡명상 등 정서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립정신건강 센터의 정신과 의사, 간호사 등 정신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력 검사, 지능검사, 종합심리 평가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신청함도 운영하고 있다. 공감대화법 익히기, 대인관계 기술 습득,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등을 위한 집단상담(정서안정 패키지, 건강한 마음 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반의 경우에도 입소 후 심리상태 검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반은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노년기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재활 및 정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예방과 노년기의 바람직한 심리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 5 심화·직무교육

제2하나원은 성인 남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초 사회적응교육과 함께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심화교육과정을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심화교육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2017년도에는 요양보호사·미용기능사·한식조리기능사·1종 대형 운전면허·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중국어 취업준비과정 및 영농정착 교육 등 7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91명이 수료하였다.

심화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과정수	수료	자격증 취득
2013년	3	69	43
2014년	5	103	72
2015년	8	216	70
2016년	8	247	206
2017년	7	291	246



지게차 운전면허 과정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직무 전문성 제고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2013년부터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청소년 지도교사,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외교부 재외공관 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총 7개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290명이 수료하였다.

## 직무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과정수	수료
2013년	7	318
2014년	11	440
2015년	10	521
2016년	8	315
2017년	7	290

또한, 공무원 교육원 및 통일관련 단체, 지역 학생·주민·공무원 등 총 847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통일교육원 연계 외국인 대학생 방문



간동중 학생 대상 인식개선 교육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 1 가족관계등록 및 주택 지원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과 주민등록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신분 확립과 관련된 절차가 완료된다. 하나원은 2007년 6월부터 전국 시·도별로 주민등록 기준지 22개를 지정하여 교육생이 하나원을 수료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희망하는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입주하게 된다. 통일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주택을 배정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먼저 입국한 가족의 거주지를 고려하지만 지역별로 알선 가능한 주택의 상황도 감안하여 추천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 주택 알선 현황

(단위 : 세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세대수	1,837	1,815	1,320	1,027	1,232	969	1,096	1,044	10,340

## 2 주요 정착금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 기본금을 비롯한 각종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착금 세부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기준		금액
기본금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 분할지급금은 분기별로 3회 지급	1인(초기 400, 분할 300)		700
		2인(초기 500, 분할 700)		1200
		3인(초기 600, 분할 1000)		1600
		4인(초기 700, 분할 1300)		2000
		5인(초기 800, 분할 1600)		2400
		6인(초기 900, 분할 1900)		2800
		7인 이상(초기 1000, 분할 2200)		3200
주거 지원금		1인		1300
		2~4인		1700
		5인 이상		2000
지방 거주 장려금	「가」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나」지역 :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다」지역 : 「가」와 「나」를 제외한 지역	1인	「나」 지역	130
			「다」 지역	260
		2~4인	「나」 지역	170
			「다」 지역	340
		5인 이상	「나」 지역	200
			「다」 지역	400
정착 장려금 (*13.4.30 이후 사회 진출자)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미만		미지급
		500시간		120
		500시간~740시간		120시간당 20 (최대 160)
	추가 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구분		기준		금액
	자격취득 장려금	1회에 한정		200
	취업 장려금	6개월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450	(지방) 550
		2년차	(수도권) 550	(지방) 650
		3년차	(수도권) 650	(지방) 750
정착장려금 총액(최고액)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가산금	연령 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	1급	1,540
			2~3급	1,080
			4~5급	360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입원시 최대 9개월 지급		1개월에 80 지급 (최대9개월)
	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	보호결정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360(세대당)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제3국 출생자녀 (2명 이내)		400(1인당)	
고용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지원		연 600 (최고 2,400)
미래행복 통장	자상형성 지원	거주지 전입 6개월후 3개월 이상 취업시, 근로소득의 30% 이내 월 10만원 ~50만원 저축시 1:1매칭 지원		최대 4년, 2,400 지원 (기본 2년 +연장 2년)

\* 2014.11.29 이후 입국자부터 미래행복통장 제도 적용으로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지원제도 폐지

\*\*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분할 지급

정착기본금은 세대를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하나원 수료 직후 초기 지급금을 지급하고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금을 지급한다. 1인 세대의 경우 기본금은 총 700만원이며, 이 중 초기 지급금이 400만원, 분할 지급금이 300만원이다. 기본금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00만원이었으나 2013년부터는 사회 편입 초기의 생활안정을 위



해 7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17년에 1,22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86억 1,200여만원의 기본금을 지급하였다.

기본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2,435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기본금	13,932	13,815	12,167	9,173	9,429	7,609	8,277	8,612

정착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령(보호여부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양육을 위하여 지급한다. 동일인에게 중복의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금액이 많은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하고, 동일세대에 대한 가산금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이내이며, 기본금 지급 종료 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2017년에 북한이탈주민에게 2,552건, 8억 200여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였다.

가산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산금	장애인	664	499	315	243	212	140	110	80
	연령	842	849	671	795	658	602	457	327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485	809	568	717	631	570	475	385
	장기치료	43	40	57	40	43	29	10	10
계		2,034	2,197	1,611	1,795	1,544	1,341	1,052	802

\*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은 사회 진출 1년 후 부터 지급하는 규정에 의거 2018년부터 지급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500시간 이상 740시간까지의 직업훈련 수료자에게 120~16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취득 장려금은 자격증 취득 시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 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하고 있다. 3년간 취업 장려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은 1,650만원, 지방은 1,9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7년에 2,404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105억 8,9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원)

구분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		총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0	985	1,500	856	1,712	325	650	1,325	6,686	3,491	10,548
2011	726	1,181	819	1,638	352	704	2,406	11,813	4,303	15,336
2012	1,118	1,916	1,472	2,944	496	992	3,455	17,204	6,541	23,056
2013	774	1,221	952	1,904	266	532	3,304	16,608	5,296	20,265
2014	706	1,082	879	1,757	181	362	3,631	18,238	5,397	21,439
2015	516	753	733	1,466	135	270	2,844	14,272	4,228	16,761
2016	252	360	455	910	64	128	2,483	12,078	3,254	13,477
2017	98	137	202	404	12	24	2,092	10,024	2,404	10,589

또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1,552개 업체에 73억 9,3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개/명/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업체수	1,419	1,717	2,915	2,824	2,659	2,670	2,084	1,552
인원	1,963	2,565	3,976	4,206	3,966	3,501	3,353	1,872
지급액	9,733	13,132	15,335	15,742	14,615	13,304	10,268	7,393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게 주택 임대애 필요한 주거지원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책정된 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2017년에는 1,22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182억 1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주거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2,435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1,221
주거지원금	24,069	26,997	25,516	21,454	23,288	19,530	19,983	18,20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방거주 및 지방취업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거주 장려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그 외의 지역을 첫 거주지로 선택하여 전입한 후 2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거지원금의 10~20% 상당액을 지원한다. 2017년에 353명에게 7억 2,100만원의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 지방거주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1,126	369	744	752	555	420	443	353
지급액	1,673	805	2,323	1,806	1,172	857	952	721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은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학에 진학하면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 내에서 12학기) 동안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전액 면제, 사립대학의 경우 학비의 50%를 해당 학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2017년에는 232개 대학 1,844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41억 2,000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하였다.

### 사립대학 교육지원 현황

(단위: 개/명/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학수	156	157	183	200	253	218	239	232
지급 인원	952	1,334	1,570	1,704	1,894	2,006	1,934	1,844
지급액	2,352	3,157	3,294	3,747	4,212	4,555	4,216	4,120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거주지보호기간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2017년에는 572명에게 18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 제4절 북한이탈주민 자립 기반 마련

### 1 취업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핵심은 일자리라는 인식 아래, 취업 확대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역량 증진과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상대적으로 취업 역량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였다.

#### (1) 고용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노동부 「내일배움 카드제(직업훈련개발 계좌제)」를 통해 지급된 직업훈련비 한도(2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개인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취업역량 등을 정확히 진단받고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훈련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토록 하고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축하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역량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23개 지역 적응센터와 함께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소자본 창업지원 및 영농 정착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취업지원센터」는 2012년 3월에 개소되어, 1:1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 구직자 등록 등의 체계적인 DB관리, 취업교육, 동행면접 및 「하나원 진로교실」 등을 포함한 구직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총 1,92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2017년도 취업지원센터 알선 및 채용실적

(단위 : 건, 12월 말 기준)

구분	구직등록	구인등록	알선	취업	전화상담	대면상담	동행면접
건수	2,999	3,640	2,628	1,926	19,369	11,463	1,119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총 직원의 30% 이상 채용하였거나 이를 약정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창출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17년에는 2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4개의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39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3) 자립형 소규모 창업 및 영농 지원 사업 추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음식업 창업을 지원하였다. (사)PPL, (주)워드푸드, 현대자동차 그룹 등과 공동으로 2017년 3개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의 소셜프랜차이즈 매장을 창업하였다. 또한 2016년도에 렛츠런파크 서울과 부산에 7개소의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한데 이어서, 2017년도에 3개소(렛츠런파크 서울, 렛츠런파크 제주, KC대학)를 추가 지원하였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북한이탈주민이 소규모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천안 등 총 7개소에 자활사업단을 설치하여 28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7년도에 북한이탈주민 거주 밀집 지역 내 어르신, 한부모 여성 등 비경제활동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창출 및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활 사업장 2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창업 사전교육 현장

이 외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소규모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본인이 불입한 금액(10~50만원)만큼 매칭해 주는 햇빛플러스 통장을 운영하여 2017년도에 개설한 8명을 포함하여 34명을 지원하였다.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총 477명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은 물론 창업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4주) 및 농가실습(6개월) 후영농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영농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까지 총 28명('16년 16명, '17년 1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영농성공패키지' 및 영농실습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농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영농에 진입한 초기 북한이탈주민에게 2014년도부터 비료, 농약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 지원받은 33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에게 초기 영농정착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밖에 농촌진흥청의 협조로 영농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이 북한이탈주민이 영농 및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작목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4) 북한이탈주민의 공직 채용 활성화

정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월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부 내 채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까지 20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정부 부문에 재직하고 있으며,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201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북한이탈주민 채용 실적」을 지표로 확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실제로 2017년 1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121명으로, 2016년 12월 말의 64명에 비해 89%가 증가했다.

## 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사업

정부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5.28. 공포, 11.29. 시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제도인 미래행복통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12월 말까지 572명이 가입하였다.

미래행복통장 가입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가입인원				중도해지	가입유지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급 인원	572	10	182	380	53	519
지원 금액	2,222	-	373	1,849	-	-

자산형성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려는 제도이다.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근로소득 중 일부분을 주거마련 등의 목적으로 매월 저축할 경우,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매월 적립하여 만기 도래 시 그 적립금을 지급하게 된다.

### 자산형성제도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적용 대상자	• 角.11.29(법 시행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된 자부터 적용
적용 기간	• 거주지 보호기간(5년) - 출산, 군복무(직업군인 제외)의 경우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납입기간 유예
적립금 납입기간	• 최대 4년(2년+1년+1년, 보호기간 5년 이내) - 단, 직업훈련 및 직업탐색 기간 없는 조기취업에 따른 저숙련 일자리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원 수료 후 최소 6개월간 가입제한
적립금 출처 제한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으로 제한
만기 지급시 사용처 확인	• 주거·교육·사업 등 용처 제한, 만기해지요건 심사 - 만기가 되더라도, 실제 용처에 사용했을 경우에만 지급
만기 수령 조건부과	• 기초생계수급 탈피, 금융 및 자산관리 교육이수

2017년은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시작된 지 3년째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을 4월 12일자로 개정 및 시행함으로써 그 동안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던 사안을 보완하였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미래행복통장 가입률이 2016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약 33%였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82%로 증가하였다.

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제정(2016.2.22.)	개정(2017.4.12.)
사용용도 제한 완화	• 목돈이 필요한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만 가능	•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상품 가입 추가
신청자격 완화	•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 동일직장이 아니더라도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완화
일시중지 기간 확대	• 일시중지 기간은 최대 6개월	• 일시중지 기간은 최대 1년
금융교육 이수조건 완화	• 연 1회 이상 이수	• 가입기간(초기 2년) 동안 1회 이상 이수
지원금 회수(탈수급) 규정 완화	•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전 분야에서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회수	• 생계급여에서 탈수급을 못할 경우에만 지원금 회수 - 의료·교육·주거분야 수급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 3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 (1) 통일전담 교육사 운영 및 학습 지원

정부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2012년부터 「통일전담 교육사(舊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일전담 교육사는 총 23개 학교에서 22명이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탈북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학교 내의 보살핌 외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문학습지 지원(월평균 1,200명), 영어화상교육 지원(월평균 120명)과 함께 총 475명에게 약 5억 4,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2017년부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

녀가 대학에 입학 시 첫 학기 등록금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6명에게 2,460만원을 지급하였다.

##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시설 지원

정부는 2017년에는 탈북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1개교)에 22억원을 지원하였다.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인가(학력인정) 대안학교(2개교)에 16억원, 탈북과정에서 학력공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에 편입을 못하고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6개소)에 약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방과후 공부방 시설(19개소)에 약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모나 친척 없이 남한에 입국한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시설(13개소)에도 약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학교 및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멘토링 프로그램



탈북청소년 영어 말하기대회



진로 체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민간의 재능기부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별 (초·중·고·대)로 체계화한 멘토링을 확대(총 650여명 → 800여명) 지원하였다. 특히, 사회 각계각층의 멘토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유망사업 체험 및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선후배 멘토링 등을 운영하였다.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해외 연수(미국, 호주, 영국) 프로그램은 2015년도 7명에서 2016년 및 2017년에는 11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한미교육위원단(풀브라이트)과 업무협약을 체결(2.21.)하여 탈북대학원생의 미국 현지 석·박사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탈북청년 대학원 장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최종 5명을 선발하였다.

2011년부터 시작된 「남북대학생 통일준비PT 경진대회」는 남북대학생이 함께 통일 문제를 고민해 보고 스스로 만든 기획안을 발표해 보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남북대학생들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였다. 2017년도에는 13개팀 총 60명의 남북대학생이 참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7년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2.13.)하여 ‘자녀양육 가산금’을 신설하였고, 2017년부터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첫 학기 대학 등록금을 실비로 지원하였다. 또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정원 내 특별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4 생활안정 지원

##### (1)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정착과정에서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12월 말 기준으로 90명(심리 전문 58명, 취업 전문 32명)이 전국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취업·건강·심리·법률 등 정착생활 전 분야에 걸쳐 총 8만 9,399건의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를 수행하였다.

2017년도 상담 실적

(단위 : 건, 12월 말 기준)

상담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 제도	심리/정서	생계/의료	가정 문제	법률 관계	기타	합계
상담실적	38,525	2,536	8,163	5,522	5,181	11,733	1,268	3,558	1,974	10,939	89,399

## (2) 정착도우미

정착도우미를 희망하는 민간의 자원봉사자는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입주와 주민등록 신고를 돕고, 월 2회 가정 방문을 하는 등 ‘친근한 이웃’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적응센터에서 약 755명의 정착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 (3)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급여 1종 혜택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장기이식이나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공공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비 지원을 협력하는 ‘공공의료체계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먼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한 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자부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협약을 체결한 공공의료기관이 진료 후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17년에 ‘공공의료지원체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모두 41개이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하나원 수료 직후 지역적응교육 및 구직활동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에 필요한 초기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



다. 약 3주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쌀, 고추장, 라면, 냄비, 그릇,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31종 25만원 상당으로 구성하여 세대 당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대 당 100만원의 가전제품 쿠폰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지연 공급 등에 대비하여 쉼터를 운영하였다. 2017년 8월까지 11개의 쉼터가 운영되다가, 9월부터는 그 중 활용도가 낮은 2개의 운영을 중단하고 9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임대주택 지연공급 사례가 감소하고, 지연기간도 단축되는 추세에 따라 쉼터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였다.

##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2017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1)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확산

2017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례를 연간 160건을 발굴하여 260가지의 콘텐츠 형태로 제작하였고, 이를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례를 소재로 지하철·라디오 공익광고를 만들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공익 광고도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KBS라디오, 국군방송, VOA 라디오, 연

합뉴스, 월간지 등의 언론매체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사례를 확산하여 ‘친근한 이웃’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광고

국민들의 관심 및 참여 제고를 위하여 총 3회의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하여 총 1,771명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남북 하나서포터즈’2기가 출범하여 대학생들이 정착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교류하고, 이 경험을 자신들의 SNS를 통해 배포하도록 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활동을 다방면으로 추진하였다.

언론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 방송을 말한다’라는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방송PD, 작가 등 미디어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이 북한이탈주민과 주민통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도왔다.

한편 격월간 소식지인 ‘동포사랑’(매회 2만 6,000부)과 ‘영문 뉴스레터’(매회 3,000부), 브로슈어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배포하여 관련 소식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고, 정착사례 모음집인 ‘착한 공감’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 (2)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통합의 장인 ‘남북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2017년도 부터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여 상·하반기 2회로 확대 개최함



통일기원 퍼formance



도전! 통일골든벨

으로써 남북주민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렸다. 2017년 상·하반기 남북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각각 국민대학교와 경기도 수원종합운동경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2,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착한 봉사단’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였다. ‘착한 봉사단’은 소외계층 도시락 봉사, 나무심기 봉사활동, 연탄 나르기 등의 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산적 기여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 외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평화로 2017」 행사 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하나센터, 자활센터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정착지원 부스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갔다.

## 제5절 북한이탈주민 협력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정착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총괄하고 있다.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교육, 심리상담,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거주지·신변·취업보호 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이 북한이탈주민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 (1)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9개 부처 및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에는 통일부 차관 주재로 4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세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는 또한 정부 조직 개편 상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중소기업벤처부와 지방자치단체 3개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거주지·신변·취업 보호담당관과 복지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회의체이다. 2001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협의회가 최초로 구성된 이후,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16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4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7월 「지역협의회(거주지보호담당자) 정착지원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별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에 잘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245명)은 전입과 생계, 의료급여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800여명)은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60명)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 (3)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집중교육과 취업·교육·의료·생계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 서울, 경기(2),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였으며, 2017년 12월 말 기준 2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2017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단위 :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4	1	2	1	1	1	1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1	1	1	1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크게 초기집중교육과 지역적응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집중교육을 통해서는 하나원 수료 후 지역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8일간 50시간 범위 내에서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지역 사회 이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적응지원사업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진학지원, 구직자를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과 함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민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하나센터 초기집중 교육 내용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에 입국자 3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사회통합형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지역적응센터는 정착지원의 최일선 현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친근한 이웃으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별 소통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1:1 결연 등 크고 작은 지역사회 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 (4)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지역 복지관, 종교시설,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주민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활용한 협력 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주민통합, 상호 인식 개선, 취약계층 지원, 자립지원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총 22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민간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 실적

(단위 : 개,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단체 수	30	28	24	25	24	22
지원액	380,000	380,000	411,000	373,000	323,944	263,500



# UNIFICATION WHITE PAPER



## 06 통일교육

# 06

제1절 통일교육 운영 및 기반 확충

제2절 학교통일교육 지원

제3절 사회통일교육 지원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 6장 통일교육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를 높이고 정책추진 기반을 넓히기 위해 통일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이는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핵심전달자 교육과 함께 학교, 사회, 해외 등의 여러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먼저 통일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주요 대상으로 원내교육을 실시했다. 사회 각 계의 최고경영자, 중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교원과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이버교육의 실시와 함께 2013년 이후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통일 관련 계기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각종 참여 체험 행사에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시·청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등 통일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을 위한 교재와 자료도 개발하였다.

또한,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청소년층의 성향을 고려한 참여 체험식 교육을 강화하였다. 통일리더캠프, 어린이기자단, 통일문화 경연대회 등 다양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에 2017년 한해 동안 약 1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초·중·고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일인식도가 낮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2016년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통일관련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7년에는 이러한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대학 간 정보교류를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대학 내 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전국의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실시한 열린 통일강좌 등의 다양한 참여·체험형 행사에도 2017년 한 해 동안 약 3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였다. 이 밖에 약 110만 명의 국민들이 전국에 있는 12개 통일관을 찾아 통일 관련 전시물을 관람하였다.

## 제1절 통일교육 운영 및 기반 확충

### 1 통일교육과정 운영

정부는 통일교육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총 122회 6,145명을 대상으로 전문과정, 평화통일 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사회통일 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등 총 5개 과정의 원내 통일교육과 사이버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과정 구분	전문 과정	평화통일 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 교육과정	사회통일 교육과정	글로벌 통일교육과정	사이버통일 교육과정	합계
인원	311	1,819	2,270	1,414	331	54,285	60,430

전문과정으로는 통일정책최고위과정,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통일교육 전문강사과정 등이 운영되었으며, 2017년에 총 311명을 교육하였다. 통일정책최고위과정은 사회 지도층이 통일 공감대 확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지도자과정과 서기관 이하 정부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미래기획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들 교육과정은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민·관을 통합·조정



하는 능력을 갖춘 전략적 통일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정책 최고위과정(8.3.)



통일정책 지도자과정(9.13.)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은 일선 학교,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 북한·통일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통일교육 강의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기법 및 강의자료 제작기법 등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과정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 1,819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통일교육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학교통일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의 핵심 전달자인 각급 학교 교사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으로 2,270명을 교육하였다. 동 과정은 한반도 통일 환경과 남북관계 현황, 북한동향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장(감) 및 교사, 장학관(사) 및 교육연구원(사), 통일교육 연구학교 교사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우수자에게는 북·중 접경지역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사회통일 교육과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 관련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특히 사회통일교육과정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평화통일에 필요한 가치관 정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며 1,414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북한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 특별 워크숍도 진행하였다.

글로벌 교육과정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 학생이 한반도 분단현실을 이해하

고, 우리의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예일대, 하버드대, 베를린자유대 학생 등 외국 대학생과 해외 신진학자, 주한 외국인 유학생, 재일민단동포 등을 대상으로 총 331명을 교육하였다.



북한학 관련 대학(원)생 워크숍(12.22.)



외국 대학생반(8.22.)

더불어 해외 주요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차세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정부의 통일노력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7년 해외 차세대 대상 통일아카데미에는 미주, 유럽과 아시아 12개국에서 학자, 언론인, 외교관 등 19명의 신진학자가 참석하였다.

아울러 주요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및 중국에서 4명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강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7.3.)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강연(10.16.)

한편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교원, 공무원, 학점은행제 인정, 통일직무 및 방북교육 등 다섯 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5개 과정에 총 5만 4,000명이 이수하였으며, 이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원·공무원 과정은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교육 콘텐츠는 통일 인문학, 문화예술, 에듀테인먼트 등과 결합시켜 다양화하였다. 사이버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콜센터 기능과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3,000명의 신청자들이 '통일나비'라는 이름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았다.

##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정부는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주요 교육기관에 각각 9만부 이상 배포하여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하여 도서와 영상 자료도 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에 필요한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초등 5·6학년용, 중학생용)』이라는 참고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에 사용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 교재인 『통일을 JOB아라』도 제작하였다. 이밖에 재외동포를 위한 통일교육 교재 『통일아 안녕』의 교사용 지도서와 일문판을 제작하고, 기본교재 『2017 북한 이해』를 영문판으로 번역하였다. 아울러 통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자료들을 개발하였다.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2편의 캠페인 광고와 3편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기도 했다.

### 2017년 발간 통일교육 자료



도서자료



캠페인 광고



영상자료

한편, 새로운 통일교육 대상을 발굴하여 대상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자료도 개발하였다. 그동안 통일교육에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각 장애인용 점자책 『올록볼록 통일이야기』와 화면해설영상 2편을 제작하였다. 청각 장애인용 도서 『소곤소곤 통일이야기』와 수어영상 2편도 제작하였다. 교육 자료가 부족한 재외동포들을 위해서도 공감영상 3종과 애니메이션 2종 등 총 5종의 재외동포용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그 밖에 평화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준비 차원에서 우리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용 교육자료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제작하였다.

통일교육 도서자료 개발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기본 교재	통일문제 이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 역사 속에서의 통일, 남북관계의 전개, 주변국과 한반도 통일,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비전과 통일준비	대학생, 일반 성인, 교사 등 대학생, 일반 성인, 교사 등
	북한 이해	북한 이해의 관점,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군사전략과 군사력, 경제 현황과 변화, 교육과 문화, 사회와 주민생활	
학교용 참고 교재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초등5·6학년)	남북 분단의 원인, 북한의 모습, 통일미래 비전, 통일 방안,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초등학생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중학생용)	남북 분단의 원인, 남북관계 역사, 북한 사람들의 생활, 통일의 필요성, 통일 방안	중학생용
교사용 지도서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초등용)	남북 분단의 원인, 북한의 모습, 통일미래 비전, 통일 방안,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교사 등
	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중학생용)	남북 분단의 원인, 남북관계 역사, 북한 사람들의 생활, 통일의 필요성, 통일 방안	
	통일이 안녕 (Hello, Unification)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정체성, 남북관계 및 북한 이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시·청각 장애인용 교재	소곤소곤 통일이야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정체성, 남북관계 및 북한이해,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수어 비교	초·중·고
	울록불록 통일이야기 (초등5·6학년용)	남북 분단의 원인, 북한의 모습, 통일미래 비전, 통일 방안,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시각장애인에 맞춰 내용 편집)	초등학생
	울록불록 통일이야기 (중·고등용)	남북 분단의 원인, 북한의 모습, 통일미래 비전, 통일 방안,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시각장애인에 맞춰 내용 편집)	중·고등학생
외국어 교재	2017 Understanding North Korea(영문판)	(‘2017 북한 이해’ 영문판) 북한 이해의 관점,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군사전략과 군사력, 경제 현황과 변화, 교육과 문화, 사회와 주민생활	해외공관, 한국교육원, 해외통일 교육위원 등
	통일아 안녕 (일문판)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정체성, 남북관계 및 북한 이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국·일문 병기)	재외동포 8~12세 어린이
진로직업체 협교재	통일을 JOB아라	통일 진로탐색, 단계별 유형별 통일 진로 체험 및 탐색 운영 등	중학생, 교사 등
북한이탈주 민 교재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북한이탈주민의 단순 정착을 넘어서는 구체적·실질적인 실천을 강조	통일교육 위원 등
참고 자료	통일달력	통일, 남북관계, 북한 관련 주요 일정 등을 수록하여 통일업무 활용	유관기관

통일교육 영상자료 개발 현황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대상
시·청각 장애인용 교재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시각장애인용)	구름빵의 두 주인공 홍비와 홍시가 이웃 아저씨와의 오해로 담을 쌓다가 화해하는 이야기	초·중·고
	북한주민 일상 들여다보기 (시각장애인용)	북한 사회의 계층, 의식주, 북한 인권 등을 설명하고 강력한 사회 통제 상황에서도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조명	초·중·고
	무인도 (청각장애인용)	우연히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남북 청년이 서로 힘을 합쳐 생존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정을 쌓아가고 통일을 염원	초·중·고
	북한주민 일상 들여다보기 (청각장애인용)	북한 사회의 계층, 의식주 생활, 북한 인권 등을 설명하고 강력한 사회 통제 상황에서도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조명	초·중·고
외국어 교재	Cloud Bread, Uncle's Garden	(구름빵, 아저씨의 정원 영문판) 구름빵의 두 주인공 홍비와 홍시가 이웃 아저씨와의 오해로 담을 쌓다가 화해하는 이야기	재외동포
	Deserted Island	(무인도 영문판) 우연히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남북 청년이 서로 힘을 합쳐 생존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정을 쌓아가고 통일을 염원	
	Unsent Letter of Dr. Jang Gi-ryeo	(장기려박사의 보내지 못한 편지 영문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 이야기를 통해 본 남북분단과 이산가족의 슬픔	
	Protect the Goryeo Ginseng	(고려인삼을 지켜라 영문판) 인삼을 매개로 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이야기와 고려인삼 보존을 위한 남북 협력	
	Haenyeo War	(해녀 전쟁 영문판) 우리의 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	
뮤직 비디오	평화통일자전거	자전거를 모티브로 남과 북 두 바퀴가 힘을 합쳐 굴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초등
	그날을 위해	아름다운 노랫말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통일의 희망을 노래	
TV 영상 자료	캠페인 광고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미래비전 등을 이미지화	소년 등 젊은 세대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통일공감 확산	
	'막이래쇼'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쉽게 통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오늘 뭐 먹지'	추석을 맞이하여 음식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 마련	



### 3 제5회 통일교육주간 운영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자치단체의 협력 속에 진행해오고 있는 통일교육주간은 2017년 제5회를 맞이하여 “함께 꿈꾸는 내일, 그래서 통일입니다”를 표어로 내걸고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통일을 주제로 하는 계기수업이 전국의 초중고에서 진행되었고, 약 98%의 학교가 참여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통일교육주간 사상 최고의 참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지역별로 다양한 참여와 체험 행사도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이 직접 통일문제를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 국무회의, 초등생 대상 통일리더캠프 등의 참여와 체험행사들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였다. 서울에서는 통일 마로니에 축제, 대전에서는 통일토크쇼, 강원도에서는 통일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에 서도 청소년 통일한마당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참여와 체험형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미래에 대해 직접 느껴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5회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일자/장소	내 용
개막 행사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5.22(월)/대한상공회의소	통일교육 관계자 초청, 유공자 포상과 소통화합의 장
특강	전국 초·중·고 계기수업	5.22(월)~26(금)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통일주제 수업
	일일통일교사	5.15(월)~6.16(금)	일일교사 각급 학교 방문
참여 체험 행사	제3회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5.20(토)/통일교육원 5.27(토)/파주	통일 이후 1년을 가정, 예상 문제점 및 정책대안 모색
	통일교육주간 소감문 공모전	5.8(월)~6.11(일)	계기수업, 통일교육주간 행사, 통일교육 동영상 시청 후 소감문 제출
	초등학생 통일리더 특별캠프	5.22(월)~23(화)/파주	체험 프로그램 강의, 현장견학 및 1박2일 캠프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지역통일교육센터	5.22(월)~28(일)/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인문학 명사특강, 통일 토크 콘서트 등
	통일관 특별 체험 프로그램	5.22(월)~28(일)/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지역통일관(7곳)	입장료 무료, 영화 상영, 통일 릴레이 미션 이벤트
	통일교육 선도대학 통일문화축제	5.22(월)~28(일)/6개 대학	공연, 토론, 사진전, 영화 상영
	시도교육청 세미나	5.22(월)~26(금)/5개 지역 (서울·인천·대구·세종·전남)	지역별 학교 통일교육 우수사례 발표, 학교통일교육 관련 정책 공유 등

또한 온라인을 통해 소감문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약 1만 8,000여 명이 응모하여 전년 대비 약 3,000건이 증가했다. tvN의 '대학토론배틀'을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 찬반토론을 방영했고, 통일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TV캠페인 광고를 내보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음(Daum)에 통일 주제 웹툰을 게재하고, 통일교육주간 기념 배지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통일 주제 계기수업(참여형 행사)



대학생들의 통일 플래시몹

#### 4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통일교육의 강화와 확대를 위해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통일교육 의무화, 통일교육주간의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법 개정안은 2017년 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협조 하에 통일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학교통일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2014년)을 맺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교육주간(5월)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12월)를 공동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2017년)하여 지방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동 활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 국방송통신대학교와도 6월 후속협약을 체결하여 통일교육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2절 학교통일교육 지원

###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

2017년 전국 초·중·고교 각급 학생 5만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1,054회 실시하였다. 이는 교구와 교재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통일·북한 문제를 이해하고, 통일 필요성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참여·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 통일리더캠프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국내 캠프는 총 39회 실시하여 전국의 초·중·고생 및 대학생 4,4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국외 캠프는 대학생과 교원, 교육청의 통일교육 담당자 등 295명을 대상으로 북·중 접경지역 및 역사유적지를 답사하는 형식으로 2회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경남 산청군 신안초등학교, 10.20.)



국외 통일리더캠프  
(접경지역, 7.11.~16.)

정부는 학교별 수요와 실정에 맞는 체험형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시·도

교육청 추천을 받은 전국 총 130개 초·중·고교에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를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1만 2,000여 명의 학생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통일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통일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제6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253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부 주관 행사 참여, 월별 기사 작성 및 통일현장 취재, 현장 체험, 합창단 활동 등 통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이 통일을 매개로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4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도 개최하였다. 2017년도에는 '통일노래 부르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48개팀 1,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대전(9.1.), 대구(9.8.), 서울(9.12.), 부산(9.15.), 광주·제주(온라인심사)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예선을 거쳐 최종 14개 팀이 결선(10.27.)에 진출하였다.



어린이기자단 발대식(4.28.)



통일노래 부르기(결선, 서울)

## 2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정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과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해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교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17년 실태조사는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597개 학교의 초·중·고 학생 10만 1,224명과 교사 4,00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4년 76.7%에서 2017년에는 81.9%로 증가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응답도 2014년 57.9%에서 2017년 66.3%로 증가하였다. 다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016년 63.4%에서 2017년에는 62.6%로 약간 감소하였다.

### 2017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 3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

학교통일교육의 모범사례 개발 및 확산을 위해 2017년 전국 50개의 초·중·고등학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자료, 운영과 자문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우수 지도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5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가 107명이 참여하여 21명이 입상하였다. 2017년 대회에서는 학교통일 교육에 인문학적·감성적 접근, 실용심리학 기법 등을 접목하여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이를 일선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 1만 1,700여 개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다.

또한 5월부터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과 함께 학교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0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5회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12.1.)



서울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5.25.)



#### 4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정부는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학생 통일인식 제고 및 통일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통일교육 선도대학’,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강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대학 통일교육 우수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주요 권역별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다. 총 6개 대학(서울대, 송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을 지정하여 대학생 맞춤형 통일교육 모델의 개발 및 개발된 모델의 적용·운영을 위한 강좌를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6개 대학의 2차년도 사업을 지원하고 연합 성과보고회(12.18.)를 개최하여 각 대학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은 각 대학에서 통일·북한 관련 특강 및 강좌 개설,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17개 대학에 19개의 옴니버스 특강이, 23개 대학에 29개의 통일·북한 강좌가 개설되어 총 9,0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정부는 통일 미래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 5월에 개최한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에는 49개 대학이 참가하였다. 대학생들이 통일한국의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되어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들을 모색·제안하고 토론하는 체험활동을 하였다.

또한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 제고와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공모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제36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 홍보영상 공모에 논문 57편, 홍보영상 156편이 응

모되었고, 그 중 논문 10편, 홍보영상 6편이 입상하였다. 입상작은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였으며, 홍보영상 입상작은 각종 사업의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현장체험  
(충남대, 3.31.)



제3회 전국 대학생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5.27.)

## 제3절 사회통일교육 지원

### 1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회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이 센터들은 전국 시·도 통일교육위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거점이 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정된 전국 17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2016~2017년 기본 및 자율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사업」은 체험학습, 열린 통일강좌, 통일순회강좌, 전문가 포럼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율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진전, 창작뮤지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1,711회에 걸쳐 약 30만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역센터들이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민간단체와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통일교육주간과 통일문화주간 등의 정부 행사와 지역사업도 연계하였다.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과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였다.

통일교육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센터장	소재지
1	중앙통일교육센터	이배용 (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53, 골든타워 빌딩(충정로2가)1215호
2	서울통일교육센터	유지수(국민대 총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77 국민대학교 산학협력관 102호
3	부산통일교육센터	한석정(동아대 총장)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 301호
4	대구통일교육센터	김상동(경북대 총장)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산격동,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508호
5	인천통일교육센터	김동성(인천대 총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B동 516호
6	광주통일교육센터	김용익 (동신대 대학원장)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동신대학교 체육관 413호
7	대전통일교육센터	김영호(배재대 총장)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414호 (도마동, 배재대학교 하워드기념관 414호)
8	울산통일교육센터	김주홍(울산대 교수)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자연과학관 518-1
9	경기남부통일교육센터	박형주(아주대 총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아주대학교 캠퍼스 플라자, 7층 702호)
10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이면재(대진대 총장)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대진대학교 본관 4층 4013호
11	경남통일교육센터	최해범(창원대 총장)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도서관 열람동 5층
12	경북통일교육센터	이근용(대구대 부총장)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산학협력연구동 1502호
13	전북통일교육센터	김응권(우석대 총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전북일보빌딩 4층
14	전남통일교육센터	정병석(전남대 총장)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 봉은빌딩 2층
15	강원통일교육센터	김현영(강원대 총장)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312호
16	충남통일교육센터	황선조(선문대 총장)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선문대학교 본관 538호
17	충북통일교육센터	윤여표(충북대 총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번지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771호
18	제주통일교육센터	고성준 (제주대 명예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8길 (이도2동 2009-9)20-3 3층



서울통일교육센터 열린통일강좌(7.14.)

## 2 통일교육위원 교육활동 지원

정부는 1987년부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2016년에는 제20기 통일교육위원 800명을 신규 위촉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과 통일의지 제고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통일교육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통일교육위원 대상 정책설명회(1회), 연찬회(3회), 해외 위원 초청 연찬회(1회), 국외 출장 순회교육(2회), 전체 위원 워크숍(1회)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관련 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통일교육위원 전체 워크숍(9.25.)



해외 통일교육위원 초청 연찬회(9.26.~29.)

### 3 통일관 운영 및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통일관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전시관이다. 통일교육주간과 통일문화주간에 전국 12개의 지역 통일관에서 통일 릴레이, 통일 보드게임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오두산통일전망대에는 1992년 개관 이래 2017년 12월 말까지 총 195만명(2017년 35만명)이 방문하였다. 2017년에는 3층과 4층 전망실에 카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확대하였다. 또한 실향민화가 4인의 그림들과 이산가족기록물로 두 차례의 기획전시전을 개최하였다.

### 통일관 현황

통일관명	위치	운영 주체
오두산통일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통일부
서울통일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부산통일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인천통일관	인천광역시 남구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광주통일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대전통일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지방공사)
고성통일관	강원도 고성군	(주)고성통일전망대
양구통일관	강원도 양구군	양구군청
청주통일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청주랜드 관리사업소)
충남통일관	충청남도 공주시	자유총연맹 충남지회
경남통일관	경상남도 창원시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제주통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산가족 기록물 기획전시



어린이체험관

더불어 전국 12개의 통일관에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다양한 전시용 통일 교육 자료도 지원해왔다. 대표적으로 고성·부산 통일관에서는 영상과 탁본, 퍼즐 및 북한의 문화재 체험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편, 분야별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 관련 단체들의 협의체로서, 71개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해 31개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통일교육포럼, 회원단체 워크숍, 여성·청소년·시민 분과별 토론회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회 통일 마로니에 축제를 개최하는 등 회원 단체 간 연대사업도 실시하였다.



통일 마로니에 축제(5.25.~26.)



통일교육포럼(12.4.)



##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 1 현황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센터)는 한반도 통일 미래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2014년에 개관하였다. 개관 당시에는 통일관, 통일미래 체험관, 어울림관과 최대 4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축구장, 농구장 및 야영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의 체험 편의시설들을 확충하였다.

센터는 그 동안 청소년단체, 대학, 지자체 등 24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다양한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해 왔다. 2017년에는 경기도 연천군, 광역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근 군부대 등 13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평가」에서도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통일체험연수에는 164개 학교와 단체 등에서 연인원 3만 8,242명이 참여하였으며, 개관 이래 2017년 12월 말까지 513개 학교와 단체 등에서 누적 연인원 11만 9,434명이 참여하였다.



## 2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전국의 일선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프로그램과 재외동포, 외국인,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통일의식과 건강한 인성을 키우기 위한 통일 프로그램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안보관과 역사 의식 함양을 위해 안보·역사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1)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운영

일반 프로그램은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2박 3일 간, 6~8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12월 말 기준으로 21개의 단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 및 보완하면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통일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8개 광역시·도 청소년진흥센터 및 천안시 교육청 소속 청소년 지도자, 명지전문대와 순천향대의 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생 등 예비지도자를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함께 센터의 체험연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전국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9.1.~2.)을 유치하여 광역시·도, 시·군·구 대표 청소년,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등 270여 명에게 체험연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 합창단을 대상으로 체험연수와 합창이 어우러진 「청소년 통일합창축제」도 2016년에 이어 개최하였다.

통일체험연수 단위프로그램(21개) 현황

단위프로그램명	대상	주요 내용
통일미래체험관	초·중·고	KTX 통일열차를 타고 통일 7년 후 시대에 도착하여 문화, 관광, 물류, 자원의 4개 영역을 가상 체험
통일한국 만들기	초·중	남북의 건축문화(조형물, 기념탑)를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상징물을 제작함으로써 통일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도전! 북한말 따라잡기	초·중·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학습하고 퀴즈, 빙고 등의 활동을 통해 남북 언어에 대한 이해력 향상
We, 한마음 콘서트	초·중·고	레크레이션 등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발산함으로써 팀워크 및 소통력 향상
안보현장방문	초·중·고	열쇠·태풍전망대, 판문점 등 미래센터 인근 통일안보체험시설 방문
내손으로 만드는 통일	초·중·고	입체모형 만들기를 통해 DMZ의 생태 환경을 알아보고, 북한의 광물 자원을 활용한 교통수단 이해
퍼펙트 드림팀	초·중·고	신체단련 방식의 체육활동으로 협력과 소통력을 향상시켜 함께 이루어가는 통일 의식 향상
통일로 가는 길	초·중	분단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 한국의 올바른 미래상을 이야기
통일미래 도시건설	고	통일시대에 필요한 도시를 계획·건설하는 프로젝트 게임
통일 가로세로	초·중·고	가로세로 게임의 형식으로 남북한 관련 문제 풀기

단위프로그램명	대상	주요 내용
통일 캐릭터 만들기	초·중	펠러비즈(Perler Beads)를 이용하여 통일 캐릭터 제작
도전! 통일 골든벨	초·중·고	남북한의 역사, 문화, 사회 관련 정보를 문제해결방식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활동
통일마블	초	주요 관광지등 남북한 지역에 대한 이해력 향상 게임
특종! 통일뉴스	초·중·고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생활·문화의 변화를 뉴스로 제작하여 보도하는 활동으로 긍정적 통일시대 인식 함양
통(通) 엔터테인먼트	초·중·고	노래 가사 바꾸기, 율동 등을 통해 남북 문화의 다양성 이해
통일 채널 e	중·고	전쟁과 분단현실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본인의 느낌을 글로 표현
한반도 투어링	초·중	센터 내 주요시설과 통일관련 정보를 활용한 미션 수행 활동
통일 이야기 만들기	고	다양한 소재와 스톱모션을 활용하여 올바른 통일관 형성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초·중·고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분단현실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통일 미래상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장마당에 가면	고	배급제와 물물교환 등 북한의 경제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시장경제 우월성 인식
북한음식 만들기	고	북한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북한생활에 대한 이해 제고



청소년 통일합창축제(8.28.~30.)

## (2)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센터는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및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에는 통일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도서 벽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하나둘학교·여명학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초청하여 맞춤형 통일공감 캠프도 진행하였다.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가진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힐링캠프 행사를 개최하였고,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 155명이 휴전선 155마일을 횡단하는 평화통일 체험활동인 「휴전선 155마일」 행사도 진행하였다. 아울러, 센터 인근 군부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일체험연수의 대상을 군장병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대 및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도서지역 청소년 체험연수(7.26.~28.)



이산가족 초청 행사(9.14.~15.)

### (3) 글로벌 통일행사 개최

센터는 재외동포·외국 청소년 등에게 통일 친화적 의식을 확산시키고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립합창단·연천군과 함께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 「제3회 한민족합창축제」에는 미국·스페인에서 온 해외 합창단 2개팀 61명과 국내합창단 6개팀 224명이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2017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행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내외 청년들이 분단현장을 돌아보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해 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시리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 21개국에서 참가한 31명의 해외 분쟁지역 청년과 국내 47개 대학에서 참가한 62명의 국내 청년이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경기도 파주까지 DMZ 일대의 분단현장을 견학하였다.



제3회 한민족합창축제(8.10.~15.)



2017 평화의 바람(8.14.~20.)

이외에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청소년, 주한공관 실무자, 말레이시아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통일미래체험관 체험 및 통일안보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4) 찾아가는 통일체험연수 실시

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통일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청소년들이 통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통일체험 행사도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 주최로 2017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행사를 진행하였고, 10월 15일에는 통일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평화로 2017」 행사에도 참석하였다. 또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과 공동으로 「제2회 연천군 통일 평생 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북한음식 체험 및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연천군 청소년과 주민들을 센터로 초청하여 통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7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5.25.~27.)



제2회 연천군  
통일평생교육박람회(10.27.~28.)

### (5)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개선

센터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적용할 기존 21개 단위프로그램의 명칭을 쉽고 친근한 용어로 변경하고,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기 위한 운영모듈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통일체험연수 콘텐츠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호주의 청소년 체험관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고, 국내 국공립 수련시설 및 전시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센터 내 체험시설인 미래체험관에 개성 만월대 유물인 ‘용두(龍頭)’와 ‘불화(佛畫)’를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대표 체험시설인 ‘KTX-통일’코너를 개선하여 실제 KTX 좌석 43개를 설치하였다. 또한, 야외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년 11월에 ‘한반도 투어링장’도 개장하였다. ‘한반도 투어링장’은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한 보물찾기 형태의 청소년 프로그램인 ‘오리엔티어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구상하게 되었으며, 청소년들이 한반도를 축소한 체험장을 둘러보며 분단현실과 한반도 각 지역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다.



한반도 투어링장 개장(11월)



'KTX-통일'코너 개선(12월)





# UNIFICATION WHITE PAPER



07

## 정책추진 기반 재정비

07

제1절 정책혁신위원회 활동

제2절 북한정보 서비스 제공 및 연구저변 확대

제3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 7장 정책추진 기반 재정비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또한 국민들의 동의와 공감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북정책 및 북한 관련 자료에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다양한 분석자료와 북한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북한 신년사를 시작으로,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6차 핵실험, 당 중앙위 전원회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주요 동향에 대한 자료를 북한정보포털,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 관련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논문 작성을 지원하였다.

대북정책을 법·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법·제도적 통합을 위한 법제 정비 작업과 현행 법령 개선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남북협력기금을 충실하게 관리·운용하였다. 2017년에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과제들을 마무리 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3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2개 세부과제와 68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였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법·제도적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연구용역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7.3.21. 공포) 등 현행 법령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통일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남북협력기금은 2017년에는 총 1조 9,708억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는 9,588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7년의 집행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며,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각종 추가 지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유물자료 정리사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등에 집행하였다.

## 제1절 정책혁신위원회 활동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9월 20일에 정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 9인이 참여한 전체회의와 그 아래 개성·금강산 분과, 교류·지원 분과, 법·제도 분과, 통일교육 분과로 구성되었다. 3개월여 활동기간에는 그동안의 정책결정과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7차례 전체회의와 11차례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각 분과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정책 추진과 법치주의, 개성공단, 남북회담, 민간 교류협력, 정보사항, 통일교육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대북·통일정책 점검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12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책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별 의견

**통일정책 추진과 법치주의의 경우** 통일정책 법제화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통일부 내에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통일정책 법제화 TF 및 범부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은 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악화로 손해를 입은 경험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험 및 교역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준비해야 함

**남북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남북회담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대화 재개시 상호존중 정신을 토대로 회담대표의 격 등 형식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하여야 함.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합의서 체결과 비준, 공포 절차를 이행하여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민간 교류협력**은 법령 등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함. 민간의 자율성 보장과 북한주민 접촉신고 등의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함. 더불어 북핵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비롯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수립하여야 함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에 따라 발표 여부를 결정하고,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함. 또한 통일부의 자체적인 정보 분석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통일교육**은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항구적 지침서 개발,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민관 협의체 구축, 교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함. 또한 지역통일교육센터 등 통일교육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해야 함

## 제2절 북한정보 서비스 제공 및 연구저변 확대

### 1 북한정보포털 서비스 운영

정부는 2011년부터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구축해 왔다. 2013년에는 검증된 북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북한정보포털시스템(<http://nkinfo.unikorea.go.kr>)을 구축하였다. 2014년 1월 2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이후 자료와 DB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별 북한 현황과 최근 북한 동향, 인물, 사전, 통계, 간행물, 멀티미디어, 지도 서비스 등이 있으며, 부가 서비스로 북한 날씨, 권력기구도, 북한 주요행사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인물의 활동·학교·지역·가족 등의 정보를 시각화한 인물 관계도와 북한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약 30만여 건의 지명과 시설명을 검색하도록 구성한 북한 지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주 찾는 주요 관심 콘텐츠를 메인 화면에 전면 배치하고, 메인 화면과 메뉴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 변경을 통해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북한정보포털 홈페이지

## 2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자료센터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설립되었으며, 통일·북한 관련 도서자료 7만 7,400여 권, 정기간행물 1만 3,000여 권, 파일 자료 3,000여 건, 시청각 자료 9,5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800여 건 등 총 11만 1,632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북한 원전자료 보유 현황

(단위 : 건, 2017.12월 말 기준)

종류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청각 자료	계
자료 건수	21,485	4,491	5,922	31,898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편의를 위해 원문 DB 구축, 간편문자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안내, 북한자료 디지털화,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개선 등 효율적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에는 도서관리시스템 및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과 온라인 이용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화면 크기가 다른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원문서비스 코너를 신설하여 통일부 발간자료 총 3,329건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1,550건의 원문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영화 소개, 북한 만화 등의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들과 북한이탈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 실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 2017년도에는 50회를 개최하여 3,094명이 참여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또한 2,300여 편의 북한영화를 소장하고 있고, 언제든지 북한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서울,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지역 통일관 등 8개 지방 도시로 북한영화 상영지역을 확대해 왔다. 2017년에는 북한영화를 5,701회 상영하여 15만 8,865명이 관람하였다. 1990년 이후 2017년 말까지 누적 관람인원은 2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 정보·자료 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2월 말 기준으로 국회도서관 등 25개 기관과 정보·자료 공유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 열람실

### 3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정부는 북한 및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북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분야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까지 총 507명의 신진학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연구자 지원은 논문 작성 계획서 공모를 통해 일정 편수를 선발하고, 그 각각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전 분야 연구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2017년에는 자유 연구주제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총 10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연구논문의 활용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학술지 등재를 유도하고 있다.

제출된 논문들은 대북정책 추진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으며, 모든 논문들은 온-나라 정책연구(www.prism.go.kr) 및 북한자료센터에 게재되어 국민 누구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진연구자 지원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자 수	74명	24명	30명	30명	36명
선발 인원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지원 금액 (개인별)	700만원	1,000만원	900~1,100만원 (지정주제 응모시 우대)	1,000만원	1,000만원

## 제3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

### 1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정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2017년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시행의 마지막 해로, 기본계획에서 정한 분야별 주요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등 총 33개의 중앙행정기관은 협의를 통해 「2017년도 시행계획」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10개 사업 분야별 22개 세부과제와 68개 단위사업을 선정하였다.

「2017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과 남북 공동체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여러 정황상 현재 이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방식과 대상을 다양화하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통일역량 강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계획 과제표

사업 분야	세부 과제	단위 사업
① 북핵문제 해결	2	7
② 통일공감대 형성	3	5
③ 남북대화	1	3
④ 인도·인권 문제	4	13
⑤ 남북교류협력	2	6
⑥ 개성공단	1	2
⑦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	13
⑧ 통일교육	2	7
⑨ 평화통일역량	3	8
⑩ 통일외교	1	4
합 계	22개	68개

## 2 통일법제 구축

정부는 부처간 협업과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비한 다양한 법·제도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해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한법령 연구' 등 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법제화 수준과 법제 정비 동향을 분석하고,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남북한 경제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법령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통일 이후 법·제도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도 정리하였다.

아울러 통일법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내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8일에는 유관부처 공동학술 회의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법무부, 법제처와 통일법제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각 부처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더욱 심도 있는 통일법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통일법제추진위원회」의 자문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통일법제 현안에 대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통일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신진연구자 공모를 통해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한법령 연구」를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하였으며, 9월 15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신진연구자와 기

존 전문가들이 통일법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통일법제 유관부처 공동학술회의에도 신진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통일법제 유관부처 공동학술회의(12.8.)



##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 1 남북협력기금 수입

2017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12월말 기준 1조 1,967억원이다. 경수로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이자 상환 및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일

남북협력기금 수입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정부출연금	1,128	1,055	934	932	925	1,83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000	5,300	2,286	905	2,070	7,650
여유자금 회수	9,410	9,349	8,062	7,195	7,242	2,304
자체수입	694	1,734	701	631	370	183
합계	15,232	17,438	11,983	9,663	10,607	11,967

남북협력기금 조성



반회계에서 1,830억원을 출연 받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650억원을 예수하였다. 여유자금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32억원과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272억원 등 총 2,304억원을 회수하였고, 자체수입은 183억원이다.

## 2 남북협력기금 지출

정부는 2017년에 총 1조 9,708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9,588억원 규모이며, 이 중 684억원이 집행(집행을 7.1%)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과 남북경협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투자자산 피해지원 95억원과 유동자산 피해지원 282억원 등 총 377억원을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을 위해 집행하였다.

사업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남북사회문화교류」 항목에서는 총 37억원을 집행하였다. 우선 세계태권도연맹(WTF) 초청으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여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29명) 인적왕래 자금으로 7,400만원이 지원되었다. 다음으로 교육 학술 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에 28억원이 지원되었고, 문화유산 협력사업인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유물자료 정리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이 범정부적으로 공동 추진하는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에 14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12월 말까지 7억원을 집행하였다.

「이산가족교류지원」 항목에서는 상봉 재개를 위한 다양한 준비 작업들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사망률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이산 1세대

기록 보존과 향후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사업과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희망자 1,500여 명의 영상편지 제작을 위해 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희망자 1,178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외에도 이산가족교류 단체 지원 및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 등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였다.

「대북인도적지원」 항목에서는 국내외 기관·단체가 추진해 온 각종 대북 지원 사업들의 체계적인 통합·조정·관리를 위해 ‘통합 인도지원·협력 관리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중에는 4억원의 ‘대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한스자이텔 재단이 북한과 공동 주최한 「습지·임업분야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워크숍」 등에도 남북협력기금 4,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항목에서는 경원선 철도 남측 구간 복원 사업의 용지 매입을 위해 93억원을 집행하였고,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사업(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략물자관리원)에 28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을 위하여 2016년에 이월된 지원금 9억원과 2017년 결정된 유동자산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금 273억원을 집행하였다.

「개성공단지원」 항목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85억원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을 위하여 2016년에 이월된 지원금 9억원과 2017년 결정된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금 86억원을 집행하였다.

아울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항목의 협력기금 42억원을 집행하여 청소

년 체험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한반도 투어링장'을 조성하여 연수시설을 확충하였다. 한편, 사업비가 아닌 내부거래 부문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에 7,650억원, 예수이자 상환에 820억원 등 총 8,470억원을 집행하였다.

남북협력기금 지출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비	사회문화교류	23	21	33	61	23	37
	인도적문제해결	28	153	179	174	23	20
	남북경제협력	457	1,941	452	117	3,890	447
	개성공단	185	843	212	202	1,359	180
	소 계	693	2,958	876	554	5,295	684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5,161	6,388	3,882	1,837	2,982	8,470
여유자금 운용		9,349	8,062	7,195	7,242	2,304	2,788
기금운영비		29	30	30	30	26	25
합 계		15,232	17,438	11,983	9,663	10,607	11,967



# Appendix

UNIFICATION WHITE PAPER



# 부 록

-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 1월

- 1.1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 및 대통령 실명 비난(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
- 1.1 정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는 주장(1.1)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北 신년사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
- 1.4 외교안보부처 합동 2017년 연두업무보고  
- 통일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방안 보고
- 1.8 北,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북한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위협(北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문답)
- 1.11 北, 최고 지도부 결정에 따라 임의의 시각,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할 수 있다는 입장 재확인(주 러시아대사, 현지언론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
- 1.12 北,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가(北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 1.13 정부, 北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1.12)에서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1.17 대통령 권한대행,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선행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주한 외교단 대표 오찬간담회, 서울)
- 1.20 韓美日,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 배양을 위한 미사일 경보훈련 실시 (1.20~22)
- 1.22 韓美, 청와대·백악관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고 북핵문제 시급성에 대한 공동인식 확인(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美 마이클 플라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전화통화)
- 1.23 통일부장관, 북한 비핵화 문제는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풀어야함을 강조(서울신문 기고)
- 1.25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핵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北 최광일 외무성 미주 부국장, 美 NBC 인터뷰)



- 1.30 韓美,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대통령 권한대행과 美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

## 2월

- 2.1 北,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대남 위협 및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에 심사숙고할 것 요구(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2.2 정부, 북한의 연례적 한미 방어훈련 왜곡 및 핵 무력·선제공격 등을 거론한 대남위협(2.1)에 대해 강력히 규탄(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2.7 韓美, 북핵을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미 외교장관 통화)
- 2.12 北,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2.12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성명)
- 2.13 해경,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 발견 및 선원 5명 구조
- 2.13 김정남 피살(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16 韓美, △한미동맹 △북한·북핵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 정책 공조 구체화(한미 외교장관 회담, 독일 본)
- 2.16 韓美日, 북핵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선행을 바꾸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북핵 관련 공동성명 채택(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독일 본)
- 2.17 北, 김정남 부검에 불만 표출 및 즉각적인 시신 인도 요구(주 말레이시아대사 기자회견)
- 2.18 외교부장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 및 특단의 대응 촉구(원혜안보회의 한반도 특별세션 기조연설)
- 2.18 정부, 2.13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송환
- 2.19 정부, 여러 정황상 피살자는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보며,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고 보고있다는 입장 발표(김정남 피살 관련 말레이시아 수사 발표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

- 2.20 北,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북한 배후설' 강력 부인(주 말레이시아대사 기자회견)
- 2.23 北,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北 주민(김정남)의 사인은 심장쇼크라며 북한 배후조종설 전면 부인 및 우리 정부의 모략이라고 비난(北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
- 2.23 정부, 김정남 사망이 우리 정부의 모략이라는 北 주장(2.23) 관련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2.27 정부, 김정남 피살에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되었다는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에 대해 화학무기를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2.27 외교부장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제34차 UN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 2.28 외교부장관,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촉구(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 2.28 韓美日, △김정남 피살 사건 △북한 추가도발 △대북제재·압박 등에 대해 협의(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美 워싱턴DC)
- 2.28 北, 화학무기 보유·사용을 부인하고, 우리 정부의 北 화학무기 위협 비판 및 UN 회원국 자격 정지 촉구에 대해 '비열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UN군축회의, 스위스 제네바)

- 3.1 대통령 권한대행,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제재 기조 재확인(3.1절 기념사)
- 3.1 韓美, 한미 연합훈련 개시(3.1~4.30)
- 3.1 北,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겠다고 위협(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 3.2 軍, 北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3.1) 관련,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경우 주저 없이 단호히 응징할 것임을 강조(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정례브리핑)
- 3.3 韓中,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협의(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통화)
- 3.3 北, 대통령 원색 비난 및 투쟁 선동(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 3.5 정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3.3) 관련 국내정치 개입 행위 규탄(통일부 입장자료)
- 3.6 北,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 발사
- 3.6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3.6)가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규탄(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성명)
- 3.19 北,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실시 공개(조선중앙통신)
- 3.26 北, 한미연합훈련에 미국 특수부대 투입 관련 반발·위협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 3.26 軍,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3.26)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여 북한 정권이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합동참모본부 입장)
- 3.27 北, 통일부장관의 대북발언 등 관련 우리정부 정책 왜곡·비난(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 3.27 정부,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3.27) 관련 왜곡된 주장과 비난을 삼가고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촉구(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3.28 정부,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북한 선수단 방남 신청에 대해 승인(통일부)

4월

- 4.1 北, 집단 탈북 여종업원 대학 입학 관련 대남 비난 및 송환 요구(北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 4.1 정부, 북한의 '납치극'주장(4.1) 관련,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임을 확인하고, 북한에 강제납치라는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4.5 北,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4.5 정부, 北 미사일 발사(4.5)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결국은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을 직시해야할 것임을 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4.5 軍, 北 미사일 발사(4.5)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 합동참모본부)
- 4.6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남북경기 개최(강릉)
- 4.7 2018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남북경기 개최(평양)
- 4.14 北, 주한 미군기지 및 청와대 등을 거론하며 초토화 위협(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4.14 軍, 北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4.14) 관련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자행한다면 한미 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으로 북한 정권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동참모본부 입장자료)
- 4.15 北,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진행
- 4.16 北,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4.16 정부, 열병식에 갖가지 공격용 미사일을 내보인데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라고 비판하고, 고강도 전략도발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거듭 경고(외교부 대변인 논평)
- 4.25 北, 인민군 창건 85주년 화력훈련 진행
- 4.26 軍,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 실시
- 4.29 北,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4.29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4.29)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면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외교부 대변인 논평)

- 4.29 軍, 北 탄도미사일 발사(4.29) 관련, 북한의 지속적 도발 행위에 대해 거듭 강력 경고하고, 이러한 경고에도 도발을 계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 강조(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리 군의 입장, 합동참모본부)

## 5월

- 5.11 北,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보도(조선중앙방송 등)
- 5.14 北,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 北,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 고도 2,111.5km까지 올라가 787km 비행 후 공해상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이번 실험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5.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 및 핵타격 수단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며 필요한 시험준비를 다그쳐 나갈 것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 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음. 미국이 우리를 선불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
- 5.14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에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 5.14 軍,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에 강력히 경고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 합동참모본부)
- 5.15 北, 신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남북 합의의 존중과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병진 노선을 관철하는 정상적인 공정이라고 주장(주중 북한대사관 외신 기자회견)
- 5.15 정부,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강조(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5.18 北,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정부 대응 비난(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5.19 정부, 북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통일부 부대변인 정례브리핑)
- 5.21 北,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 北, 고체연료 지대지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5.22 조선중앙통신)
- 5.21 정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UN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 5.22 정부, 北 도발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남북관계 단절 지속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임을 강조(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5.26 정부,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통일부)
- 5.27 북한 선원 6명 구조
- 5.29 北,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 \* 北, 정밀 조종 유도체계 도입 전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주장(5.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다종의 전략무기, 주체무기들이 연이어 탄생 △오늘의 이 성과를 토대로 위력이 더 큰 전략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야 함.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다계단, 연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함."
- 5.29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일체의 도발 중단 및 조속한 비핵화를 촉구(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 5.29 軍,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
- 5.31 정부, 「6·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통일부)
- 5.31 정부, 5.27 구조한 북한 선원 6명 전원 송환

## 6월

- 6.1 대통령, 평화로운 한반도는 더는 꿈이 아니며,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것임을 강조(제12회 제주포럼 개막식 영상축사)
- 6.2 해군, 동해상에서 표류중이던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1명 구조
- 6.3 해경, 동해상에서 표류중이던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3명 구조

- 6.7 정부, 민간교류 추진,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추진 등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6.8 北,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4발 발사
  - \* 北, 이번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 국방과학원 간부와 과학자·기술자들을 치하했다고 보도(6.9 조선중앙통신)
- 6.9 정부, 6.2~3 구조한 북한 선원 송환
- 6.14 北, 6.15 공동선언 17주년 계기, 우리 정부에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요구(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6.15 대통령, 역대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을 밝히고,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김대중평화센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 6.16 정부, 남북이 함께 6·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함을 강조(통일부 대변인 논평)
- 6.21 北, 대통령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6.15) 관련 대남 비난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문답)
- 6.22 정부,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문답(6.21)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이며,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통일부)
- 6.23 北 주도 ITF 태권도 시범단 방남(6.23~7.1,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 6.23 해경, 울릉도 북동 해상에서 표류 북한 선박 및 선원 8명 구조
- 6.24 대통령,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여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등 언급(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축사)
- 6.28 北, 이전 정부에서 北 최고수뇌부 위해 계획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극형을 선고하고, 관련 인사들의 신병을 북한에 인도할 것을 요구(北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연합 성명)
- 6.29 정부, 北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연합 성명(6.28) 관련하여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적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통일부)
- 6.29 정부, 6.23 구조한 북한 선박과 선원 송환

- 6.30 韓美,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미 공동성명)
- 6.30 대통령, △대북 적대시 정책 불추진 △대북 공격 의도 부정 △북한 정권 교체·붕괴 불원 △인위적 통일 가속화 불추진 천명(CSIS 연설)

## 7월

- 7.3 제39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취임
- 7.4 北,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 北,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주장(특별중대보도)
- 7.4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7.4)를 강력 규탄하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외교부)
- 7.4 軍, 북한의 '대륙간탄도로켓 발사 성공'주장에 대해 정밀분석중임을 밝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 촉구(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
- 7.5 韓美, 北 탄도미사일 대응훈련 실시
- 7.6 대통령, '베를린 구상'발표
  - (5대기조)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지속
  - (대북제안) △10.4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실현 △7.27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 재개
- 7.11, 7.15 北, 황강댐 방류
- 7.17 대한적십자사, '베를린 구상'후속조치로 8.1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 발표)
- 7.17 정부, '베를린 구상'후속조치로 7.21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 국방부 차관)

- 7.17 정부,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설명하고, '베를린 구상'관련 우리측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베를린 구상'후속조치 관련 발표문, 통일부 장관)
- 7.21 정부,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의 관련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
- 7.28 北,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 1발 발사
  - \* 北,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2차 시험발사의 성공 주장(7.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기간에 대륙간 탄도로켓을 기습발사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
- 7.29 정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7.28)를 강력 규탄하고,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베를린 구상'후속조치의 대북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 외교부)
- 7.29 韓美,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
- 7.29 정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7.28)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것임을 경고(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 입장, 국방부 장관)

## 8월

- 8.5 남북, 외교장관 조우(제2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필리핀 마닐라)
  - \* 北 리용호 외무상, (우리측의 「베를린 구상」 대북제안 호응 촉구에 대해) "남측이 미국과 공조하에 대북 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북 제안에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음."
- 8.5 UN 안보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7.4, 7.28)에 대응하여 결의 제2371호 만장일치 채택
- 8.6 우리 어업지도선, 서해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주민 구조
- 8.7 北, UN 안보리 결의 제2371호(8.5)를 '美 압살책동의 산물', '자주권 침해', '정면 도전'이라며 '전면 배격·천백배로 결산'등 위협(北 정부 성명)

- 8.7 北, UN 안보리 결의 제2371호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비난(北 민화협 대변인 성명)
- 8.8 北,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언급·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 위협(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8.8 美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미국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8.9 北, 화성-12형 4발 동시발사로 광 포위사격 방안 검토 발표(北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발표)
- 8.10 軍,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대남·대미 위협에 대해 대북 규탄성명 발표(합동참모본부)
- 8.11 정부, 8.6 구조된 북한 주민 1명 송환
- 8.14 김정은 위원장, 北 인민군 전략군사령부 방문 및 광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결심보고 청취,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8.15, 조선중앙통신)
- 8.15 대통령,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함. 누구도 한반도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음. 우리 군은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 한편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임.
  -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님.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님.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함.
  -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함.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함.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8.17. 대통령,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춤으로써 대화 여건이 갖추어지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북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8.21~31 韓美,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실시
- 8.22 北,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UFG를 '침략전쟁'이라고 비난
- 8.23 통일부·외교부,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 실시
  - 통일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체결

등 하반기 핵심정책 추진계획 보고

- 8.26 北,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 8.29 北,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 \* 김정은 위원장, “△오늘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임.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행동을 결심할 것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 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미사일)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함.”
- 8.29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및 조속히 비핵화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외교부)
- 8.29 軍, 北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 및 추가 도발시 강력한 응징 등 경고(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
- 8.29 대통령,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
- 8.30 UN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규탄’성명 만장일치 채택
- 8.31 北, 우리 언론 北 관련 보도에 대해 ‘공화국 모독 특대형 반국가범죄’라며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추가 절차 없이 즉시 집행하겠다고 위협(중앙재판소 대변인 담화)
- 8.31 정부, 北 중앙재판소 대변인 담화(8.31) 관련, 우리 언론 보도 활동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규탄(통일부 대변인 성명)

9월

- 9.3 北, 6차 핵실험(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5.7규모 인공지진파 감지)
  - \* 北, ‘중대 보도’로 핵실험 사실 발표 및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보도(공화국 핵무기 연구소 성명)
- 9.3 정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관련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 9.4 韓美,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 극대화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정상간 전화통화)
- 9.7 대통령,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참여하는

-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9.11 北, UN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을 비난하며 자신들이 취하게 될 다음 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외무성 성명)
  - 9.1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로 채택
  - 9.13 北, 제재결의 채택놓음은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라며 강경한 입장 표명(외무성 보도)
  - 9.14 대통령, 자체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CNN 인터뷰)
  - 9.15 北,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9.15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및 조속히 비핵화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 9.16 北, 김정은 위원장 '화성-12형'발사 명령 및 훈련 참관 공개(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위원장,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함."
  - 9.17 韓美,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 합의(정상간 전화통화)
  - 9.18 대통령,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미 육군 공동 주관 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 및 육군관리회의, 축하 영상 메시지)
  - 9.18 北, 제재압박책동에 매여 달릴수록 국가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으로 질주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외무성 담화)
  - 9.19 美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UN총회 기조연설)
  - 9.20 北, 트럼프 UN총회 연설과 관련하여 개 짚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며 비난(리용호 외무상 인터뷰)
  - 9.21, 정부, UN아동기금 및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9.21 北,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 9.21, 韓美日, '최고강도 제재·압박'에 공감(3국 정상 오찬, 미국 뉴욕)
- 9.21, 대통령,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며, 안정적인 상황 관리의 중요성과 UN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UN총회 기조연설)
- 9.21, 美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거래하는 세계 모든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 서명
- 9.22 北, 김정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언급된 '초강경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태평양 상 역대급 수소탄 시험일 것이라고 경고(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 9.23 北,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지도부 참수나 군사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리용호 외무상 UN총회 연설)
- 9.23 美, B-1B 랜서 2대 및 F-15C 전투기 6대, 북한 동해의 국제 공역 비행
- 9.25 北, 트럼프 대통령의 UN총회 발언은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美 전략폭격기들이 우리 영공 계선을 넘어서지 않아도 쏘아올려 떨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가 있다고 주장(리용호 외무상 성명)
- 9.26 대통령, 10.4 선언 중 많은 것이 지금도 이행 가능하며 남북이 함께 10.4 선언이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10.4선언 10주년 기념사)
- 9.26 美, 행정명령 관련 제재대상으로 北은행(10개) 및 해외근무 북한인(26명) 지정
- 9.27 대통령, 대북특사와 관련하여 현시점은 보낼 단계가 아니라고 언급(4당 대표 회동)
- 9.28 대통령, 긴장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국군의 날 기념사)
- 9.30 美 킬러슨 국무장관, 北과 두세 개 정도의 자체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

10월

- 10.4 통일부장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부터 풀어나갈 것을 촉구(제48회 합동경모대회 격려사)
- 10.6 北, (10.3 RFA '北 개성공단 은밀히 가동'보도 관련)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우리민족끼리)
- 10.6 정부, 우리민족끼리의 개성공단 가동 시사 주장에 北은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10.6 北, 탈북 여종업원 문제 관련, UN 인권최고대표(UNOHCHR)의 남북한 방문을 통한 납치문제 해결 및 가족상봉을 위한 조치 요청(UN총회 제3위원회)
- 10.7 北,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관련, '초강경 조치'위협(북침전쟁연습반대 전민족위 대변인 담화)
- 10.11 北, △핵무기 대상 협상 불가 △美와 힘의 균형에 압박 △러시아 제안(로드맵) 불수용 등 입장 표명(리용호 외무상, 러 타스통신 대표단 면담)
- 10.15 北, 우리에게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IPU 총회)
- 10.16 北, 한반도 정세는 핵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며, 미국의 적대적 정책과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핵무기와 탄도 로켓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UN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10.19 北,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지위성을 비롯한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언급(UN총회 제4위원회)
  - \* 美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위성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
- 10.20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관련 '철면피한 궤변'비난(우리민족끼리)
- 10.20~21 北 최선희 외무성 국장,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러 국제핵비확산회의)
- 10.21 北, 동해에서 우리 어선 '홍진호'나포
- 10.21 北 UN대사, '한미연합해상훈련(10.16~20) 안보리 긴급의제로 채택 요구'서한

#### 발송(조선중앙통신 보도)

- 10.22 대통령, 우리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며 생사 확인, 서신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다고 강조(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
- 10.24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하여 피해지원이나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방북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기만술책이라고 비난(우리민족끼리)
- 10.24 北, 대북제재에 익숙해 영향이 없다고 주장(경제관료 3인, 독일 '포커스 온라인'등 외신 인터뷰)
- 10.24 美, '오토 윌비어 북핵제재법(H.R.3898)'하원 본회의 통과
  - △안보리 제재결의 미이행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 금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의 국제금융체제 접근 차단
- 10.25 北, 리용호 외무상 발언('태평양상 수소탄 시험'언급)을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군사옵션을 이야기하며 제재하는 것이 외교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언급(리용필 미국연구소 부소장, CNN 인터뷰 보도)
- 10.26 美, 「북한인권 침해 3차 보고서」 및 「3차 제재 명단」 발표(재무부)
  - 개인 7명, 기관 3개 추가
- 10.26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보고서」 보고(UN총회 제3위원회)
  - 최근 북한인권 실태와 관련, △북중 접경지역 인근 집결소 內 수감여건의 열악, 폭력 등 가혹행위 △잘못된 제도의 징후로서의 北 뇌물 증가 등 언급
  - 북한에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남북 대화시 남북자 문제 논의 등을, 우리 정부에는 △대북 관여 노력 지속 △남북대화시 인권 의제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권고
- 10.27 北, '홍진호' 및 선원 송환 계획 발표(조선중앙통신 보도)
  - 18:30 동해상 송환
- 10.27 UN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분야), 北 핵실험 규탄 결의 3건 채택
  - △L35호(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의 행동) △L19호(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L42호(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 \* 우리나라는 L35호 및 L19호 기권, L42호 찬성
- 10.28 IOC, 北 평창올림픽 참가시 모든 비용 부담 의사 표명(RFA 보도)
- 10.31 대통령,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제18기 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

- 10.31 통일부장관,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비핵화 자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그 전이라도 북한과 대화·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국회 국정감사)

## 11월

- 11.1 대통령 '한반도 문제 5대원칙' 표명(국회 시정연설)
  -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 11.3 대통령,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 없으며, 北 도발 중단이 우선이라고 언급(싱가포르 채널뉴스 아시아(CNA) 인터뷰, 11.12~13 방영)
- 11.3 北 아태평화위,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개시 19주년 행사를 위한 방북 요청에 대해 아직은 어렵다며 거부
- 11.6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지정(UN안보리 제재대상 北 금융기관 관계자 18명)
- 11.7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北 추가도발시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北 올바른 길 선택시 밝은 미래 제공 등
- 11.8 美 트럼프 대통령, 국제사회에 北 압박 동참 촉구 및 北과의 대화조건(공격 종료, 미사일 개발 중단, 총체적 비핵화) 제시 (우리나라 국회 연설)
- 11.8 北, UN 여성차별철폐위 본회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피해·부당성 주장(주제네바대사)
- 11.10 통일부, 개성공단·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 발표
- 11.10 北, 개성공단 기업 방북신청 관련 정부의 신변안전보장과 통행관련조치 요청(10.24)에 대해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책동'이라고 비난(우리민족끼리)
- 11.11 韓中,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북핵 해결 위한 양국간 소통·협력 등 합의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 베트남)
- 11.11 北,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관련) 우리 국가를 악마화한 것이라며 핵무력 건설 대업 완성에로 더 빨리 질주할 것이라고 반발(외무성 대변인 담화)
- 11.11 정부, 비핵화 협상에 앞서 북한의 도발 중단 상황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노선 전환의 분명한 신호를 보여줄 것을 북한에 촉구(외교부 장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13일)



보도)

- 11.13 북한군 1명 JSA에서 귀순, 총상으로 병원 후송
- 11.13 北 UN대사,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한미연합해상훈련(11.11~14) 비난 서한 전달
- 11.14 UN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
  -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7일 뒤까지(18.2.2~3.25) UN 헌장의 틀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
- 11.14 통일부, (UN 총회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관련) 북한이 조속히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 짓고, 남북이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대변인 브리핑)
- 11.14 정부, UN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北 인권 개선 조치 촉구(외교부 대변인 논평)
- 11.14 대통령,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되면 그에 상응해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동남아 순방 수행 취재기자단 필리핀 현지 간담회)
- 11.17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北 도발중단 긍정평가 유보 및 대화 위한 압박에 중점'(제주)
- 11.17 北, 미국이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지속하면 협상 불가 입장 표명(주 제네바대사, 로이터통신 인터뷰)
- 11.20 北, 미국이 대북공격 계획을 철회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주 태국대사, 현지 언론 '더 네이션' 인터뷰)
- 11.20 美 트럼프 대통령,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
- 11.21 정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공개
- 11.21 美 재무부, 추가 독자 대북제재 성명 발표
  - 북한 선박 20척, 기관 13곳, 개인 1명
- 11.22 이산가족(北 조선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차남) 모친 사망 1주기 추모행사 참석 및 성묘 방문을 위해 방북
- 11.22 UN군사령부, JSA 북한군 귀순 사건(11.13) 조사 결과 발표
  -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총격 △북한군 병사의 군사분계선 월선 등 두 차례 정전협정 위반 사실 발표, 북한군에 통보 및 대책 회의 요청
- 11.25 외교부장관, 북한도 올림픽 가족의 한 회원국으로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주한외교단과 평창 방문시)

- 11.29 北, 평남 평성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11.29 정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 △북한의 도발 강력 규탄 △핵·미사일 개발 포기 및 추가 긴장고조 행위 중단 촉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 천명 등
- 11.29 軍,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및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北에 있음을 경고(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
- 11.29 韓美, 北 미사일 대응 양국간 공조방안 논의(정상간 전화통화)
- 11.29 韓日,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역할 강조(정상간 전화통화)
- 11.29 北, '화성-15형 발사 성공, 국가핵무력 완성' 정부 성명 발표
- 11.29 UN 안보리, 北 미사일 관련 긴급회의 개최
- 11.29 국립 6.25전쟁 남북자기념관 개관(파주)
- 11.30 韓美, 대북 최대압박 등 대응조치 논의(정상간 재통화)

## 12월

- 12.2 北, 한미공중연합훈련(12.4~8) 관련, '핵선제공격의 구실 마련', '핵전쟁의 전주곡' 등 비난(외무성 대변인 성명)
- 12.4~8 한미공중연합훈련 'Vigilant ACE' 진행
- 12.5 정부,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과 실제 기술 완성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강경화 외교부 장관, CNN 인터뷰)
- 12.6 대통령,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 두 가지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 12.6 北,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외무성 대변인 기자문답)
- 12.7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 12.5~8 펠트만 UN 사무차장 방북, 北 리용호 외무상 등 면담
  - 방북 시 남북채널 재개,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했다고 언급(12.14 언론 인터뷰)
- 12.8 대통령,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全軍 주요 지휘관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

- 12.11 정부, 화성-15형 발사(11.29) 대응 추가 독자 대북제재
  - 北 금융기관·선박회사 등 20개 단체, 개인 12명 추가 지정
- 12.11 대통령, 北 비핵화 유도 위해 한·중 협력이 긴요하다고 언급(中 CCTV 인터뷰)
- 12.11~12 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추적 미사일경보훈련 실시
- 12.11~14 오헤아 키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탈북 여종업원들과의 면담 추진, 제재가 北 주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고려 필요성 등 언급(12.13 기자회견)
- 12.12 北 자성남 주UN대사,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NHK 보도)
- 12.12 美 킬러슨 국무장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언(애틀랜틱 카운슬·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
- 12.12 美, (킬러슨 발언 관련)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백악관 대변인 성명)
- 12.14 한중 정상회담(베이징)
  -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한 견지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4대 원칙' 합의
- 12.15 北,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12.11~12)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장 담화)
- 12.19~22 남북체육교류협회 주관·주최,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개최(중국 쿤밍)
  - 남·북·우즈벡·중국 등 4개국 6개팀 참가
- 12.20 대통령,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언급(NBC 인터뷰)
- 12.20 한미연합사, 연합훈련 연기는 한미동맹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
- 12.2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 12.26 美 재무부, 北 리병철·김정식(군수공업부 부부장) 제재 명단 포함 발표
- 12.27 영국·스위스, 北 개인 16명 및 인민무력성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
- 12.28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정책혁신 의견서」 발표
  - 대북·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시안 검토 결과 수록
  - \* 정책혁신위원회는 학계 및 민간단체 전문가 9인으로 구성, '17.9.20 출범
- 12.29 UN 안보리, 北 선박 4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 ① 남북 왕래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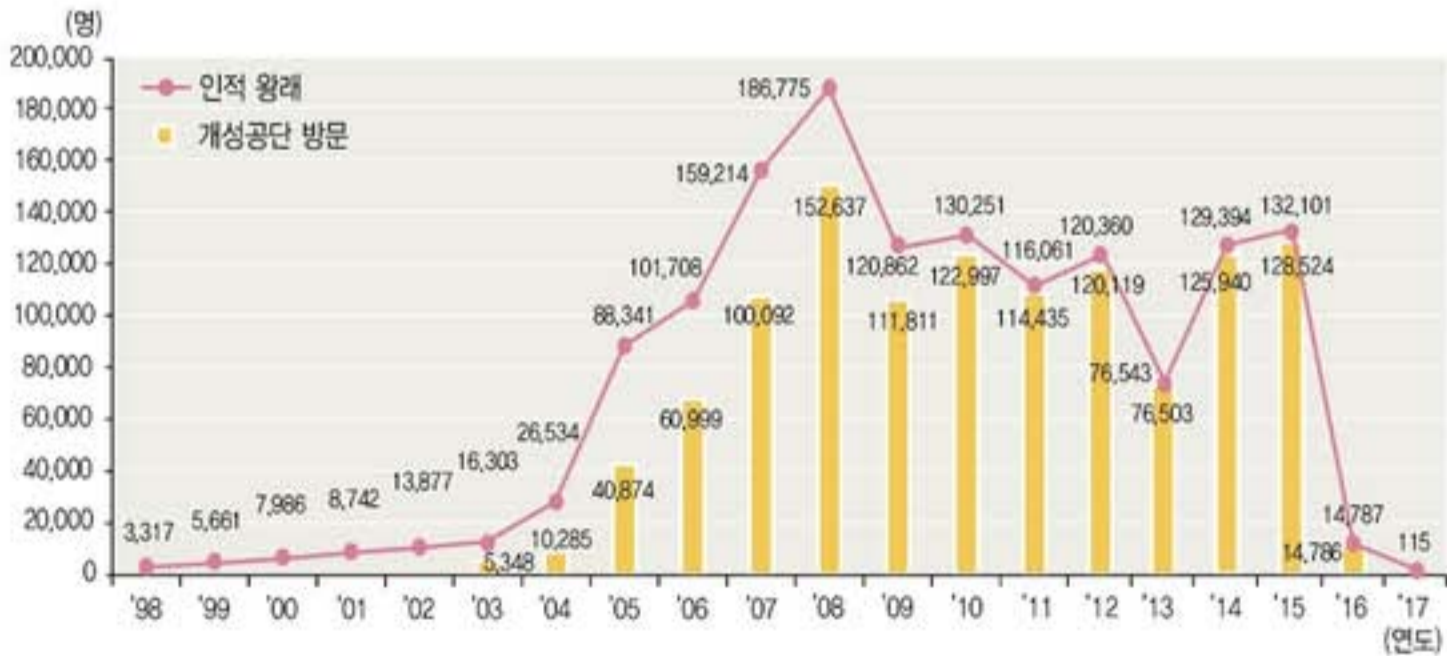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 연도	'89~'01	'02	'03	'04	'05	'06	'07	'08	'09
남→북(방북)	27,152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북→남(방남)	1,534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합계	28,686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구분 \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남→북(방북)	130,119	116,047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52	1,453,558
북→남(방남)	132	14	0	40	366	4	0	63	8,354
합계	130,251	116,061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115	1,461,912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 ②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개성 관광		-	-	-	-	-	-	-	1,484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구분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금강산 관광	해로	-	-	-	-	-	-	-	-	-	-	-	-	552,998
	육로	234,446	345,006	199,966	-	-	-	-	-	-	-	-	-	1,381,664
	합계	234,446	345,006	199,966	-	-	-	-	-	-	-	-	-	1,934,662
개성 관광		-	7,427	103,122	-	-	-	-	-	-	-	-	-	112,033
평양 관광		-	-	-	-	-	-	-	-	-	-	-	-	2,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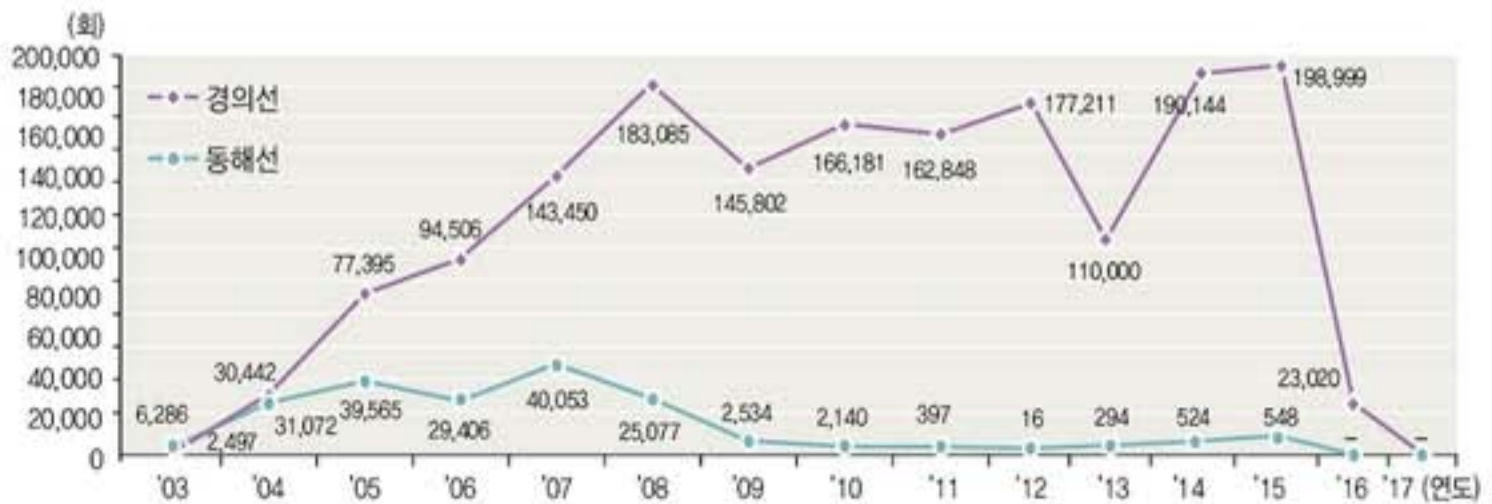
### ③ 남북 차량 왕래 현황

(단위 : 회)

구분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차량 (운행 횟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3,085	145,802	166,181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2,140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8,162	148,336	168,321

구분	연도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차량 (운행 횟수)	경의선	162,848	177,211	110,000	190,144	198,999	23,020	-	1,705,580
	동해선	397	16	294	524	548	-	-	177,912
	합계	163,245	177,227	110,294	190,668	199,547	23,020	-	1,883,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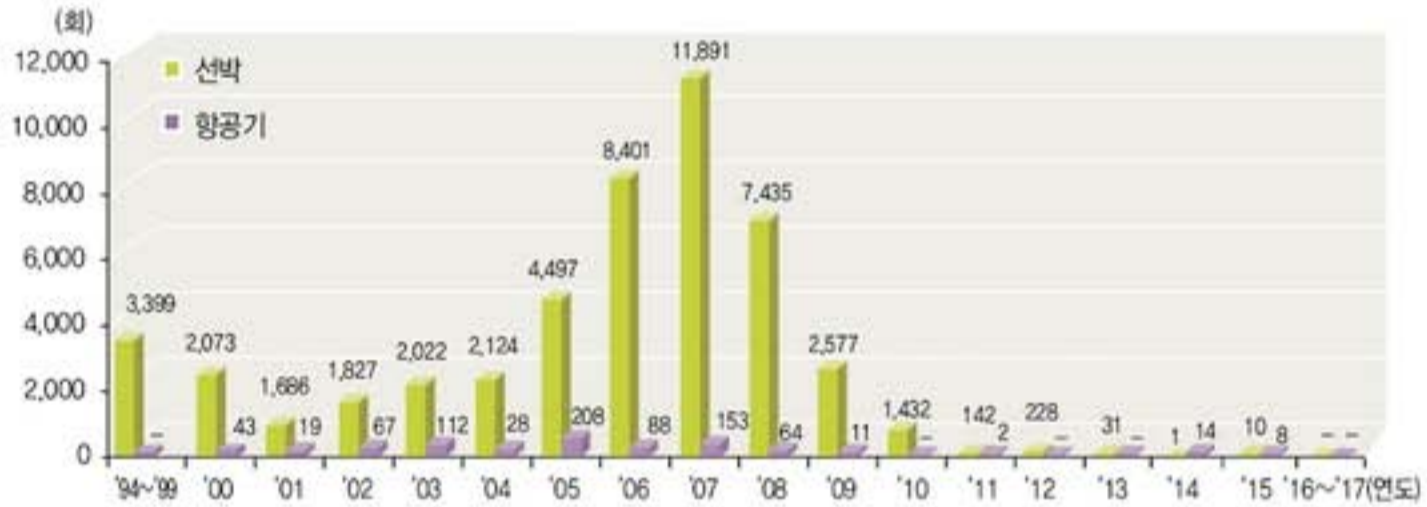
####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 회(편도))

구분	연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구분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17	합계
선박		7,435	2,577	1,432	142	228	31	1	10	-	49,776
항공기		64	11	-	2	-	-	14	8	-	817



#### ⑤ 연도별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 출경 인원·차량 현황

(단위 : 명/대)

구분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누계
경의선 육로	인원(명)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263,258	115,026	126,107	115,249	121,038	76,826	126,745	129,804	14,786	0	1,412,489
	차량(대)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1,309	72,929	83,308	81,414	88,586	55,007	95,079	99,518	11,437	0	853,227
동해선 육로	인원(명)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3,682	3,051	436	53	451	1,387	1,791	0	0	1,558,307
	차량(대)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1,027	198	8	147	262	274	0	0	89,034
출경인원 합계		43,038	321,088	402,485	350,641	529,882	487,230	118,708	129,158	115,685	121,091	77,277	128,132	131,595	14,786	0	2,970,796
출경차량 합계		4,392	30,899	58,720	62,076	91,892	103,765	74,252	84,335	81,612	88,594	55,154	95,341	99,792	11,437	0	942,261

## 2 남북교류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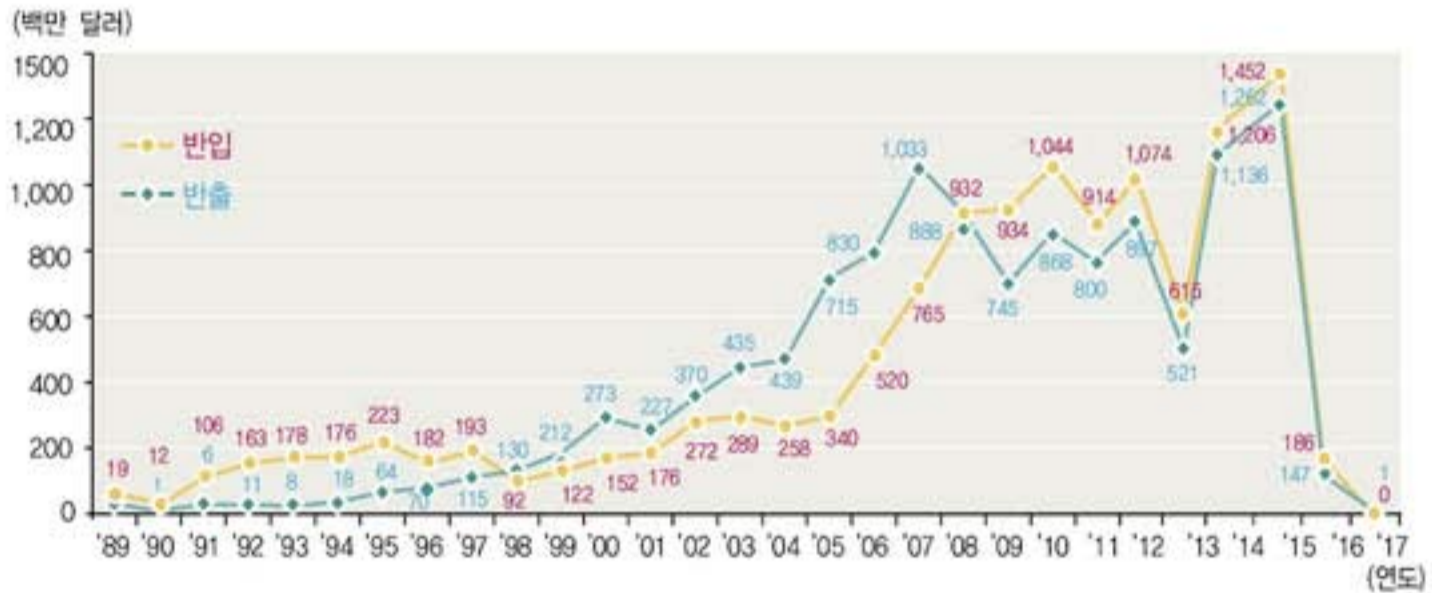
### ①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반출	0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합계	19	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3	642	724	697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반입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615	1,206	1,452	186	0	12,596
반출	715	830	1,033	888	745	868	800	897	521	1,136	1,262	147	1	12,223
합계	1,056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136	2,343	2,714	333	1	24,819

※ 반올림으로 인해 각 년도의 반입/반출 '소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1백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 ② 남북교역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반입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52	4,720	5,023	6,356	5,940
반출	1	4	23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4,853	6,953
합계	67	83	323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11,209	12,893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반입	9,337	16,412	25,027	31,243	37,307	39,800	33,762	36,504	20,566	38,460	45,640	5,352	1	376,975
반출	11,828	17,039	26,731	36,202	41,293	44,402	40,156	45,311	25,562	47,698	55,267	6,072	3	432,102
합계	21,165	33,451	51,758	67,445	78,600	84,202	73,918	81,815	46,128	86,158	100,907	11,424	4	809,077

### ③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 연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204	186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493	530
합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0	588

구분 \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반입	202	381	421	450	482	486	448	363	377	359	349	362	226	1	848
반출	575	712	697	803	813	771	740	676	705	644	697	718	447	60	1,119
합계	634	775	757	853	859	822	795	702	731	674	718	742	489	61	1,134

\* 품목은 반입과 반출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계'는 항목 간 합과 일치하지 않음.



#### ④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남북교역 유형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반입	반교역·위탁가공	441	646	624	499	334	4	1	1	0	0	0	-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기타·경공업협력)	77	120	308	435	710	909	1,073	615	1,206	1,452	185	-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 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1	0	0	0	0	1	-	-	0	0	-	0
	<b>반입 합계</b>	<b>520</b>	<b>765</b>	<b>932</b>	<b>934</b>	<b>1,044</b>	<b>914</b>	<b>1,074</b>	<b>615</b>	<b>1,206</b>	<b>1,452</b>	<b>186</b>	<b>0</b>
반출	반교역·위탁가공	116	146	184	167	101	-	-	-	-	-	-	-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기타·경공업협력)	294	520	596	541	744	789	888	518	1,132	1,252	145	-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 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421	367	108	37	23	11	9	3	4	10	2	1
	<b>반입 합계</b>	<b>830</b>	<b>1,033</b>	<b>888</b>	<b>745</b>	<b>868</b>	<b>800</b>	<b>897</b>	<b>521</b>	<b>1,136</b>	<b>1,262</b>	<b>147</b>	<b>1</b>

※ 반올림으로 연도별 반입/반출 유형별 '소계'와 반입/반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교역액 1백만불 미만은 '0'으로, 없을 경우 '-'으로 표시

###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 개성공단 통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2016.2.10)으로 2015년말 기준으로 작성

#### ① 개성공단 입주기업수

구분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입주 기업수(개)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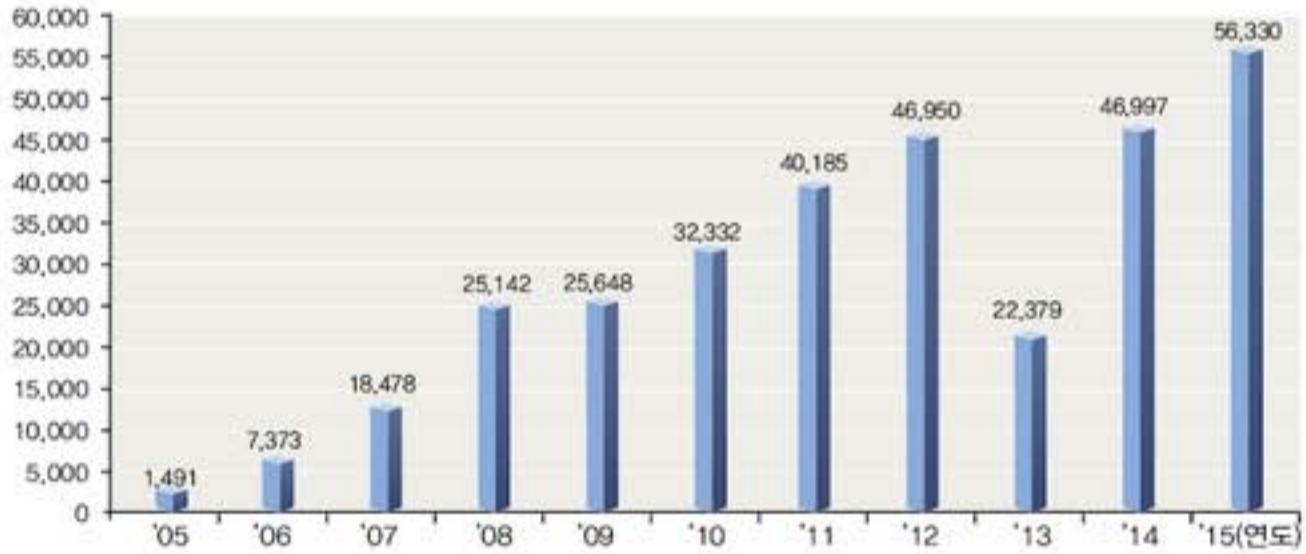
(단위 : 개)



### ②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단위 : 만달러)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생산액 (만 달러)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9	46,997	56,330	323,303



### ③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북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88



학력분포(%)			평균연령(세)			연령대별(%)					성별(%)	
대졸	전문학교	중졸	전체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8.1	7.1	84.8	39.0	42.3	36.4	0.1	20.5	30.1	39.5	9.8	32.2	67.8

## ④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주요 지원 실적(2017.12.31 기준)

구분	세부 구분		금액
기업 피해지원	보험 가입분(104개사)		2,945억원
	보험 미가입분	투자(144개사)	714억원
		유동(157개사)	1,248억원
	소 계		4,907억원
근로자 위로금	개성공단 주재원 위로금(804명)		124억원
자금 지원	자금 대출	특별대출(404건) * 신·기보, 지신보 519억원 포함	2,126억원
		신규대출(324건)	2,711억원
	소 계		4,837억원
	대출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남북협력기금	725억원
		공공·민간 금융기관	3,827억원
	소 계		4,552억원
세 제 및 보험 지원	국세	납기연장(202건)	1,400억원
		징수유예(37건)	21억원
		체납처분 유예(27건)	11억원
		소 계	1,432억원
	지방세	납기연장(139건)	100억원
		징수유예(12건)	2억원
		소 계	102억원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148개사)		14.3억원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931명)	
휴업(휴직)수당 추가지원(1,714명)		10억원	
실업급여(434명)		24억원	
긴급 생계 지원(10건)		0.3억원	
소 계		64.3억원	

##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 ①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정 부 차 원	무상 지원											
	당국차원	1,854	-	-	-	339	944	684	832	811	949	1,221
	민간단체 기금지원	-	-	-	-	-	34	63	65	81	102	120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	24	240	154	-	-	229	243	205	262	19
	합계	1,854	24	240	154	339	977	976	1,140	1,097	1,314	1,360
	식량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합계	1,854	24	240	154	339	2,034	976	2,650	2,607	2,673	3,147
민간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6	782	578	766	1,558	780	
합 계	1,856	37	422	429	562	2,421	1,757	3,228	3,373	4,231	3,926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정 부 차 원	무상 지원													
	당국차원	2,000	1,432	-	-	183	-	-	-	-	-	-	-	11,249
	민간단체 기금지원	133	216	241	77	21	-	-	-	-	23	1	-	1,177
	국제기구 등을 통한 지원	139	335	197	217	-	65	23	133	141	117	1	-	2,744
	합계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2	-	15,171
	식량차관	-	1,505	-	-	-	-	-	-	-	-	-	-	8,728
	합계	2,273	3,488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2	-	23,898
민간차원(무상)	709	909	726	377	201	131	118	51	54	114	28	11	8,972	
합 계	2,982	4,397	1,164	671	405	196	141	183	195	254	30	11	32,871	

※ 세부항목 금액의 단수 반올림 처리로 집계에서 차이 발생

## ②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민간차원	생사 확인	-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서신 교환	-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기타	-	-	-	-	-	-	-	-	-	-	-	-	-	-	-
	상봉	-	6	11	19	12	11	17	18	61	109 (2)	200 (18)	152 (392)	170 (493)	208 (616)	283 (677)
당국차원	생사 확인	65 (157)	-	-	-	-	-	-	-	-	-	-	792 (5,276)	744 (4,937)	261 (1,635)	963 (7,091)
	서신 교환	-	-	-	-	-	-	-	-	-	-	-	39 (39)	623 (623)	9 (9)	8 (8)
	방남 상봉	30 (81)	-	-	-	-	-	-	-	-	-	-	201 (1,720)	100 (899)	-	-
	방북 상봉	35 (76)	-	-	-	-	-	-	-	-	-	-	202 (674)	100 (343)	398 (1,724)	598 (2,691)
	화상 상봉	-	-	-	-	-	-	-	-	-	-	-	-	-	-	-

구분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민간차원	생사 확인	209	276	69	74	50	35	16	3	6	9	6	4	6	10	3,886
	서신 교환	776	843	449	413	228	61	15	21	16	22	11	26	43	46	11,582
	기타	-	-	-	-	-	-	-	-	-	-	-	-	-	1	1
	상봉	188 (470)	95 (261)	54 (105)	55 (167)	36 (97)	23 (51)	7 (18)	4 (14)	3 (6)	3 (5)	5 (10)	1 (4)	3 (8)	1 (2)	1,755 (3,416)
당국차원	생사 확인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	302 (2,399)	302 (2,176)	-	-	316 (2,342)	-	317 (2,155)	-	-	7,970 (57,567)
	서신 교환	-	-	-	-	-	-	-	-	-	-	-	-	-	-	679 (679)
	방남 상봉	-	-	-	-	-	-	-	-	-	-	-	-	-	-	331 (2,700)
	방북 상봉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	195 (888)	191 (886)	-	-	-	170 (813)	186 (972)	-	-	3,854 (17,228)
	화상 상봉	-	199 (1,323)	80 (553)	278 (1,872)	-	-	-	-	-	-	-	-	-	-	557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등록 현황 : 131,143명 등록(생존 62,631명, 사망 68,512명)

※기타 : 성묘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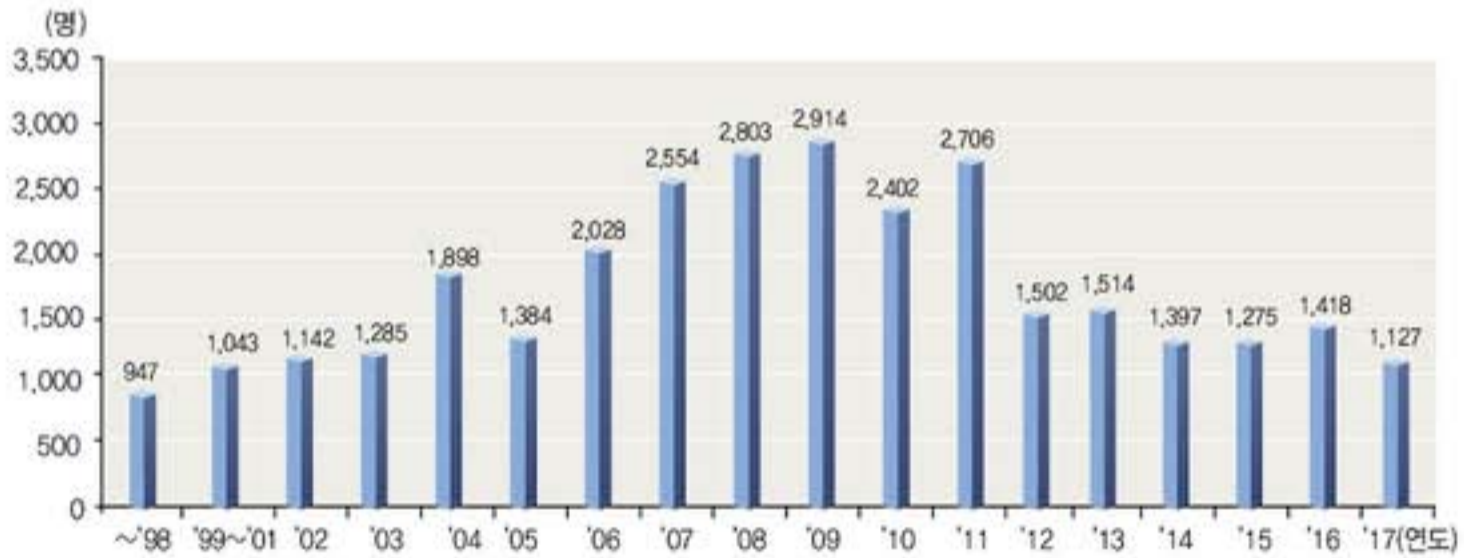
### ③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남성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여성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구분 \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잠정)	합계
남성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8,993
여성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22,346
합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31,339
여성 비율	75%	71%	73%	76%	78%	80%	79%	83%	71%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센터 입소 기준으로 집계



## 5 남북회담

### ①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연도 구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정치	156	4	10			7	4	8	18	2	4	5	2	10
군사	0								4	2	9	6	5	3
경제	5								3	3	14	17	13	11
인도	111			3		4	1		2	1	3	7	2	4
사회· 문화	34										2	1	1	6
합계	306	4	10	3	0	11	5	8	27	8	32	36	23	34

연도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17	합계
정치	5	13				-	-	1	2	3	-	254
군사	4	11	2		1	1	-	-	1	-	-	49
경제	8	22	3	4	3	-	-	22	3	1	-	132
인도	3	3		2	4	-	-	1	1	1	-	153
사회· 문화	3	6	1			-	-	-	1	-	-	55
합계	23	55	6	6	8	1	-	24	8	5	-	643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단위 : 건)

구분	'71-'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의서 건수	40	-	2	1	-	3	3	1	18	4	23	31	21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17	합계
합의서 건수	23	10	39	5	1	1	-	-	8	2	3	-	239

## 6 통일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06년 이전	'07	'08	'09	'10	'11	'12
교육인원	484,786	34,045	32,039	71,944	68,946	119,736	133,284

구분	'13	'14	'15	'16	'17	합계
교육인원	185,194	97,830	145,363	161,677	169,096	1,703,940

## 7 연도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연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14	'15	'16	'17	합계
연수인원	3,401	38,226	39,565	38,242	119,434



###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 1 총괄표(구성 및 사용실적)

##### ①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정부출연금	기타출연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총조성액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2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2002	490,000	77	505,000	42,036	1,037,113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20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2009	-	56	81,000	74,354	155,410
2010	-	-	875,000	51,238	926,238
2011	-	2	104,400	38,276	142,678
20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20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2014	93,400	-	228,600	47,304	369,304
2015	93,203	238	90,500	19,863	203,804
20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20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합계	5,076,803	2,724	7,766,274	967,937	13,813,738

## ② 사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주민왕래지원	-	-	-	-	-	-	-	-	-	3	3	237	11	11
문화·학술·체육협력	9	-	-	-	-	-	-	0.3	-	21	1	-	7	32
이산가족	-	6	-	-	-	-	-	0.1	4	28	13	20	30	32
인도적 지원(무상)	-	-	-	-	1,824	55	191	199	339	977	976	1,226	1,501	1,225
인도적 지원(유상)	-	-	-	-	-	-	-	-	-	867	190	967	1,561	1,020
남북경제협력(무상)	13	-	-	-	-	49	-	-	-	146	898	368	763	760
남북경제협력(유상)	-	-	-	-	-	-	-	675	-	5	461	667	547	814
경수로 대출	-	-	-	-	-	-	-	-	-	3,259	3,003	3,009	3,287	870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	-	-	-	-	-	-	-	-	190	391	2,124	3,250	3,895
- 공자기금원금상환	-	-	-	-	-	-	-	-	-	-	-	1,498	2,549	3,100
- 공자기금이자상환	-	-	-	-	-	-	-	-	-	190	391	626	701	795
기금관리비	3	3	3	3	2	2	2	2	2	3	5	6	8	12
합 계 <sup>주)</sup>	25	9	3	3	1,826	106	193	876	345	5,499	5,941	8,624	10,965	8,671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주민왕래지원	38	53	17	27	-	-	-	-	-	5	-	-	1	405
문화·학술·체육협력	75	74	69	38	30	21	26	23	21	28	61	23	36	596
이산가족	133	99	269	182	22	20	1	4	21	31	52	16	7	990
인도적 지원(무상)	1,866	2,125	2,272	597	294	192	102	24	132	148	122	7	13	16,407
인도적 지원(유상)	1,793	39	1,405	-	-	-	-	-	-	-	-	-	-	7,842
남북경제협력(무상)	2,045	1,521	1,725	1,101	415	177	167	421	2,037	441	283	4,489	600	18,420
남북경제협력(유상)	568	710	1,400	366	240	453	130	221	746	223	36	760	27	9,049
경수로 대출	227	89	-	-	-	-	-	-	-	-	-	-	-	13,744
공자기금 원리금상환	3,658	8,713	6,337	1,512	1,159	9,306	1,086	5,161	6,388	3,882	1,836	2,982	8,470	70,341
- 공자기금원금상환	2,820	7,730	5,330	500	100	8,200	-	4,000	5,300	2,916	905	2,070	7,650	54,668
- 공자기금이자상환	838	983	1,007	1,012	1,059	1,106	1,086	1,161	1,088	966	931	912	820	15,673
기금관리비	16	18	19	21	39	29	27	28	30	30	30	26	25	394
합 계 <sup>주)</sup>	10,419	13,441	13,513	3,844	2,199	10,198	1,539	5,882	9,375	4,788	2,420	8,303	9,179	138,188

주) 「연도별 기금사용 현황」은 사사오입하여 억 원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합계액과 현황표상의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2 2017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금액	사업구분
2017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지원	4,193	통일정책 (78건, 4,193)
북한태권도시범단 방남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74	남북사회 문화교류 (8건, 3,674)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지원	2,754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유물자료 정리사업 지원 등	846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43	이산가족 교류지원 (26건, 689)
남북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	146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지원	400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	1,277	대북인도적지원 (13건, 1,321)
남·북·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	44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지원 및 업무 위탁	2,700	경협기반조성(무상) (146건, 40,370)
(주)0000 등의 투자자산 피해지원	896	
(주)0000 등의 유동(재고)자산 추가 피해지원	27,276	
대북반출물자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위탁 지원	7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로드맵 수립 용역 지원	45	
2017년도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지원 등	9,378	
(주)0000 등의 경협보험	97	경협보험 (19건, 97)
개성공단 기업 앞 개성공단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65	개성공단 기반조성 (69건, 15,39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5,800	
(주)0000 등의 유동(재고)자산 피해지원	933	
(주)0000 등의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	8,59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2,656	개성공단 운영대출 (4건, 2,656)
<b>합계(363건)</b>	<b>68,397</b>	

## IV. 통일부 국정과제 현황



대 과제	실천과제	주요 내용
국정과제 90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①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체계 구축 운영 ② 국제사회 지지 확보(계속) 및 즉시 실시 가능 사업 우선 추진
	②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①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②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③ 남북경협 재개	① 경협·교역·금강산 및 개성공단기업 피해지원 ② 민간경협 재개 ③ 개성공단 재가동 ④ 금강산관광 재개 여건 조성 및 재개 ⑤ 남북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⑥ 남북 ICT 교류·협력
	④ 남북접경지역 발전	①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등 공동대처시스템 마련 ②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③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국정과제 91번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①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① 남북대화 재개 ② 분야별 실무회담 개최 ③ 남북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② 남북기본협정 체결	① 남북기본협정 추진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 비전 천명 ② 남북기본협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
국정과제 92번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①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①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②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③ 북한인권 관련 사례축적 및 법적쟁점 연구 ④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 노력 ⑤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②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②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 공여 및 국제협력 추진 ③ 당국차원의 지원 추진
	③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①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정례화, 교류 제도화 등 추진 ②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여건 마련 ③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대 과 제	실 천 과 제	주 요 내 용
	④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① 탈북민 지원체계 효율화 ②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③ 탈북민-지역주민간 소통강화
국정과제 93번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① 교류협력 재개	①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개 추진 ②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체육교류 활성화 추진 ③ 민간단체 교류협력 역량강화 지원
	②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① 다면적이고 융합적인 남북교류협력 확대 ②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③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①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② 지자체 자율성을 위한 기반 구축
	④ 교류협력 제도개선	①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② 교역·경험보험제도 개선
국정과제 94번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①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① 여야·정 및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②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방안 연구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②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추진	① 통일 관련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② 통일센터의 단계적 확대
	③ 평화통일 관련 차세대 전문가 양성	① 차세대 통일 전문가 양성으로 통일 미래대비 역량 강화 ② 주변국 한반도문제 전문가 양성으로 네트워크 구축 ③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확대
	④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① 통일교육 방향 및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② 청소년들의 긍정적 통일인식 형성을 위한 학교통일교육 확대 ③ 취약한 대학사회 통일교육 기반 확충 및 대학생 통일 무관심 해소 ④ 범국민 통일공감 확산 ⑤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 자료 개발·배포

2018 북한인구총조사	78
3-No	28
3대 목표	23
4대 전략	25
5대 원칙	27
6.25전쟁 납북자	94

## G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	60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경협기업 지원	66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70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70
국가 핵무력 완성	16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102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104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세계여자선수권대회	74
국제태권도연맹(ITF)	74
기업 종합지원센터	90
기업지원 상담센터	67

## L

남북 개발지원협력	77
남북 하나의 시장	31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66
남북관계 주요 일지	240

남북관계 주요 통계	260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63
남북군사당국회담	18, 125
남북농업협력 민관정책모럼	79
남북적십자회담	18, 105
남북체육교류협회	75
남북협력기금 수입	233
남북협력기금 지출	234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63
남북회담 역량 강화	129

## C

대북지원 민간단체 역량 강화	109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10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109
독일통일 총서	50
동북아산림협력 국제회의	78

## M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20, 46
문화유산 교류	70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	99
민간통일준비 역량강화	35

**E**

베를린 구상	14, 20, 59, 124
북한개발협력 민관정책포럼	79
북한의 주요 도발과 대북제재 조치	17
북한이탈주민 공직 채용	160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140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169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37
북한이탈주민 자선형성지원 사업	16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흐름도	136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현황	150
북한인권 조사 자문단	116
북한인권정책협의회	112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111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111
북한자료센터	225
북한정보포털 서비스	224
북한주민 접촉신고 및 수리 현황	60
분야별 경영정상화 지원 대책	82

**스**

사회통일교육 자원	203
세계식량계획(WFP)	108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74
세계태권도연맹(WTF)	74

신경제지도 TF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32
-----------------------	----

**오**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75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61
유엔 대북제재	57
유엔 총회	18, 115
유엔아동기금(UNICEF)	108
유엔인구기금(UNFPA)	45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100
이산가족 디지털박물관	98
이산가족 영상편지	97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보관사업	97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96
이산가족 초청행사	98
이산가족 현황	96
인터넷 통일방송	41

**즈**

정책혁신위원회	222
종교 및 문화·예술·학술 교류	72
지방자치단체 교류	75
지역기반 통일사업	35
지역통일교육센터	203

ㄱ

체육교류 61

ㄴ

통일공감대 확산 34

통일관 149

통일교육 자료 개발 190, 192

통일교육 선도대학 201

통일교육과정 운영 184

통일교육위원 186, 203

통일교육주간 193

통일교육지원법 196

통일교육협의회 208

통일을 위한 약속(통일국민협약) 34

통일기획패널 36

통일문화 기획행사 38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39

통일법제추진위원회 231

통일부 국정과제 276

통일사료 수집 및 활용 40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39

통일을 위한 사회적 약속 34

통일준비백서 43

통일준비연구 종합 DB 51

통일테마전 39

ㄷ

평양 태권도 대회 74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62, 74

평화로 2017 36, 40, 172

평화통일전략대화 44

ㄹ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199

학교통일교육 지원 197

한독통일자문위원회 50

한미정상회담 14

한민족합창축제 21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0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 4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09

한중정상회담 18, 127







2018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인쇄일 2018년 4월  
발행일 2018년 4월  
발행처 통일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전 화 02-2100-5764  
팩 스 02-2100-5679  
인쇄처 장애인동반성장협회  
Association Together with the Disabled  
T.02-2269-5565

